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석 사 학 위 논 문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

2014년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국 제 안 보 전 략 학 과
국 제 안 보 전 공
한 광 철

HANSUNG UNIVERSITY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구형회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

Japan`s Military Build-up and Korea`s Countermeasure research

2014년 6월 일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국 제 안 보 전 략 학 과
국 제 안 보 전 공
한 광 철

HANSUNG UNIVERSITY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구형회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

Japan`s Military Build-up and Korea`s Countermeasure research

위 논문을 국제안보전략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6월 일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국 제 안 보 전 략 학 과
국 제 안 보 전 공
한 광 철

HANSUNG UNIVERSITY

한광철의 국제안보전략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HANSUNG UNIVERSITY

국 문 초 록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안보전략학과
국제안보전공
한 광 철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던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등 숨겨놓은 발톱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동북아지역에서는 중국의 급부상에 따른 일본과 중국의 갈등과 대립 구도가 심해지고 있고, 중국 견제를 위한 미・일동맹 강화와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적정한 수위를 넘고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불러오고,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촉진시켜 한반도 뿐만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더욱 고조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일본은 평화헌법을 제정하여 전수방위, 비 군사대국화, 비핵 3원칙, 방위비 GNP 1% 제한 등 개별적 자위권을 추구하다가 탈냉전이후 북핵위협, 중국의 경제 및 군사대국화 추진, 영토 및 해양 권익 충돌의 새로운 형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 ・ 일동맹체제를 강화하면서 안보정책을 본토방위 외에도 국제안보환경 개선을 포함시켜 Global한 차원으로 확대시키고, 군사력 건설방향도 재래식 침략억지에서 탈피 “다기능적이고 탄력적인 방위력 구축”으로 전환하고 있다.

일본의 군사력을 확대시킨 요인으로는 국내 보수세력의 “보통국가”, “보통군대” 보유요구 증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현대화 추진, 북한의 전략무기 위협에 따른 안보불안 고조, 미국의 안보역할 확대 요구 등 국내・외적 요인

HANSUNG UNIVERSITY

이 작용하고 있다. 반대로 군사력 확대 제약요인으로는 헌법상 제약, 방위정책상 제약, 주변국 반발가능성에 다른 국제정치적 부담, 일본내 반대세력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의 군사력 확대 추진실태로는 “보통국가”, “보통군대” 건설과 동적방위력 운영을 위한 제도적 정비, 즉응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부대구조 개편, 해·공군중심의 첨단전력 건설, 미국·대만·인도 등 주변국과의 군사공조체제 강화를 통해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군사력증대가 한국안보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으로는 동북아 지역 군사력 균형유지, 한반도 유사시 후방지원을 통한 대북 억제력 제고, 해상교통로 확보가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이며, 한국의 군비증강을 위한 막대한 국방비 지출 초래, 한반도 분단 고착화 및 북핵 폐기 지연, 독도 및 EEZ 수호에 있어 상대적 방어역량 약화 등이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일본의 군사력증강에 대한 한국의 단기적 대응방안으로는 첫째로 기준에 입각한 대응, 둘째로 최첨단 군사력 건설을 위한 국방비 적정수준 확보, 세째로 한·일 군사협력 및 교류 확대가 요구되어 진다. 중·장기적 대응방안으로는, 첫째로 일본을 포함한 미래 불특정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자주적인 안보역량의 확보, 둘째로 미국과의 지속적인 안보협력체제 강화를 통한 전쟁 억제력 및 동북아 평화 구축, 셋째로 동북아 지역에서의 일본의 군사대국화 방지 및 역내 분쟁예방과 한반도의 평화적 여건 조성을 위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자간 안보협력기구 구축, 그리고 넷째로 지역 내의 안정을 추구하는 한·일간의 공동안보이익을 위하여 미군주둔에 대한 한·일간의 군사협력과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지를 위한 협력, 해상수송로 보호에 대한 책임분할, 중국의 지역패권 부상 억제를 위한 한·일간의 협력 등 지역안보의 동반자로서의 미래지향적인 한·일 협력관계를 추진하여야 한다.

【주요어】 집단자위권, 평화헌법, 전수방위, 동적방위력, 보통국가화, 보통군대, 다자간 안보협력기구

HANSUNG UNIVERSITY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목적 ····· 1
제 2 절 연구방법 및 범위 ····· 3

제 2 장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 ····· 4
제 1 절 중국의 부상과 군사적 영향권 확대 ····· 4
제 2 절 미국 주도 동맹관계의 변화 ····· 6

제 3 장 일본의 방위정책 변화와 군사력증강 실태 분석 ····· 9
제 1 절 일본 방위정책의 변화 ····· 9
제 2 절 일본의 군사력 증강요인 ····· 25
제 3 절 일본의 군사력 증강실태 ····· 31
제 4 절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 39

제 4 장 한국의 대응방안 ····· 45
제 1 절 단기적 대응방안 ····· 46
제 2 절 중·장기적 대응방안 ····· 49

제 5 장 결 론 ····· 56

참 고 문 헌 ····· 61
부 록 ····· 65
ABSTRACT ····· 75

HANSUNG UNIVERSITY

〈 표 목 차 〉

<표 1> 일본 방위력 정비계획 추이 ····· 10
<표 2> 일본의 최근 방위비 추이 ····· 14
<표 3> 각국 국방비 추이(2009년 ~ 2013년) ····· 15
<표 4> 육상자위대의 전력변화(1995년 ~ 2011년) ····· 34
<표 5> 해상자위대의 전력변화(1995년 ~ 2011년) ····· 35
<표 6> 항공자위대의 전력변화(1995년 ~ 2011년) ····· 36

HANSUNG UNIVERSITY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동북아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군사·경제적 강대국들 간에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지역이다. 동북아 국가들은 역내에서의 주도적 지위와 국가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상호 협력과 견제를 병행하고 있다.[1)]

일본 주변의 안보환경은 영토문제와 통일문제를 비롯한 불투명, 불확실한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며, 주변국 군사력의 계속적인 현대화와 북한에 의한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실시를 포함한 도발행위, 중국에 의한 일본 영해 침입 및 영공 침범을 포함한 일본 주변 해·공역에서의 활동의 급속한 확대·활발화, 지속적으로 활발해지고 있는 러시아의 군사활동 등이 나타나고 있어 한층 악화되고 있다.[2)]

그동안 일본은 평화헌법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경제력에 상응하는 군사대국이 되기 위해 점진적이고도 지속적인 군사력 증강을 꾀해 왔다. 현재 일본의 경제력은 미국, 중국이어 세계 3위이며, 일본의 국방예산은 사실상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에 이어 세계 5위의 수준이다. 또한 일본은 세계 유일의 피폭국가로서 강한 반핵 정서를 가지고 있으나, 핵연료 사이클도 완전히 갖추어 전 세계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플루토늄 연료 이용계획을 확대하고 있으며, 원료 보유 및 기술에 관한 한 언제든지 핵무장이 가능한 국가이기도 하다.[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방위정책의 주요 원칙은 평화헌법과 자위권, 전수방위(專守防衛), 문민통제, 비핵3원칙, 무기 수출금지 3원칙, GNP 1%이내 방위비 책정 등 이른바 군사대국화가 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의 냉전종식 이후 일본은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소극적이었던 방위정책에서 탈피하기 위한 조심스러운 행보를 모색해 왔고, 이러한 변화는 1990년대 이후 방위정책과 관련하여 제정된 주요법안인 PKO 협력법(1992), 미·일 신안보공동선언, 주변사태법(1999), 테러대책 특별조치법(2001), 유사

1) 대한민국 국방부. (2012). 「2012 국방백서」, 서울: 대한민국 국방부, p.13.
2) 국방정보본부. (2013). 「2013년 일본 방위백서」, 서울: 국방정보본부, p.2.
3) 한겨레신문. 2002. 5. 6. 10면

HANSUNG UNIVERSITY

법제(2003)[4] 등에 반영되었고, 2007년에는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함과 아울러서 '군보유'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까지 통과시켰고, 최근에는 일본정부가 집단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표면적으로 일본의 방위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이후 현재까지 헌법과 미·일 동맹, 전수방위(專守防衛) 등의 테두리 안에서 시행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은 기회가 있을때 마다 군사력을 증강하고 '군사대국화'를 위한 방위정책의 변화를 모색해 왔다. 특히 미국의 대 테러전을 지원하기 위한 '테러대책 특별조치법'의 제정은 전후 최초로 전쟁시에도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었다.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세계유일의 초강대국 미국과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여전히 세계 2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무한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보통국가화' 추진을 통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일본 등, 한반도 주변은 세계 강대국들에 의해 지구촌 그 어느 지역보다 군사적 안보위협이 매우 높은 곳이다. 이렇듯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은 지정학적 갈등 요인, 국가간 불신과 경쟁이 내재되어 있는 가운데, 그 중심축에 위치한 한국의 입장은 더욱 곤욕스러울 수밖에 없다. 구한말 주변 열강들 틈바구니 속에서 국가 생존능력을 견지하지 못하여 결국 치욕적인 역사를 남긴 당시의 안보상황이 어떤 측면에서는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는 과거사를 회고할 때, 오늘의 안보상황을 슬기롭게 타개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부끄러운 역사의 재현을 보일 수도 있으며, 국지적인 분쟁이라도 발생한다면 곧바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밖에 없다는 현실직시가 절실히 요구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동북아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의 한 축인 일본의 방위정책과 군사력 증강실태를 알아보고,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한국 안보에

---

4) 유사법제 [有事法制]: 일본이 타국의 무력공격 등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자위대와 정부의 대응방침 등을 명시한 법규로, 여기서 유사(有事)는 전쟁을 뜻하는 말로, 1977년 당시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 총리 때부터 연구라는 명목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주변국의 압력과 전수방위(專守防衛)의 원칙에 따라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유사법제는 논의 자체가 금기시 되었다. 그러다 2003년 6월 일본 중의원에서 90%에 가까운 찬성률로 유사법제 관련 3개 법안이 통과되었다.

HANSUNG UNIVERSITY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제 2 절. 연구방법 및 범위

본 논문에서는 일본이 제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에 국제안보 환경의 변화를 자국의 방위정책 및 군사전략에 어떻게 반영하였고, 일본 군사력 증강의 국내·외적 주요 요인과 군사력 증강실태, 일본 군사력 증강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이에 따른 한국의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냉전 종식이후 세계적으로 군비가 축소되고 있는 추세와는 달리 오히려 군비를 확장하고 있는 일본의 방위력 증강요인 및 실태를 살펴보고, 이것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의 대응책을 제안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일본과 국내외 방위백서를 비롯한 각종 간행물, 일본의 방위정책에 관련된 각종 국내·외 학술논문과 관련서적 등을 활용한 문헌 분석적인 서술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의 내용은 총 5개장으로 편성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2장에서는 군비경쟁을 부추기는 동북아시아 안보정세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일본의 방위정책 변화와 군사력 증강실태를 일본방위정책의 변화, 군비증강 유발 요인, 군사력증강 실태, 일본의 군사력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순으로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일본의 군사력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에서는 연구목적 및 방법에 입각하여 분석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한국의 안보가 깊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논문의 마무리를 짓고자 한다.

HANSUNG UNIVERSITY

제 2 장.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

탈냉전 이후 동북아지역의 안보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변화되는 안보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역내 안보질서 형성에 큰 역할을 하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대 강국간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 최근 급격한 경제발전을 통하여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은 일본 및 한국과 동맹관계를 재편하고 있다. 미국의 독주에 대한 반대로 중국은 강국부활을 국가전략으로 표명하는 러시아와 핵개발을 강행하는 북한과 군사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중국의 부상 및 군사적 영향권 확대, 미·일 동맹관계의 재편, 그리고 미·중과 중·일 간 협력 및 경쟁관계의 구도를 중심으로 동북아 전통적 세력관계의 재조정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을 알아보고자 한다.

제 1 절. 중국의 부상과 군사적 영향권 확대

중국의 급부상은 일본의 대외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환경 변화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현재 지역질서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중국의 부상이다. 중국은 천안문 사태와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의 충격에서 벗어나 실용주의적 개방·개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함으로써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세계은행(IMF/IBRD)은 중국경제가 구매력 기준으로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하여 화제가 된 바 있다. 중국 스스로도 2020년까지 종합국력이 미국을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세울 정도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인구 12억의 중국경제가 21세기 중 규모면에서 세계 1위로 부상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경쟁력과 기술력 수준에서 명실공히 경제 초강대국의 지위를 얻기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이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개혁개방 노선에 따른 고도성장으로 미래의 경제대국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21세기 중 중국은 경제대국의 일원으로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중국이 경제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 자본주의 시장에 자신의 경제체제를 성공적으로 연착륙시킬 수 있느

HANSUNG UNIVERSITY

냐에 달려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WTO 가입은 매우 주목되는 일이다.

최근 중국은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국방예산을 증가시키면서 군사력을 현대화하고 있다. 특히 고도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중국은 90년대 들어 국방비의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중국의 국방예산은 거의 3배나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일본의 예산이 1.3배 증가한 것과는 비교가 된다. 중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90년대 들어 중국의 국방예산은 경제성장을 능가하는 평균 13%대의 성장을 해왔으며, 최근 수년간에는 17%가 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현재 중국은 전통적인 적극방어 전략을 기반으로 '정보화 조건 하 국지전 승리'를 표방하고 있으며, 정보화된 군대를 목표로 군사력의 현대화를 추구하고 있다.[5)]

이에 육군은 군 조직 및 구조를 경량화하고, 상륙작전 및 정보화 조건 하 원거리 기동작전 등 신속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18개 집단군에 육군 항공단(연대) 창설을 추진하여 현재는 8개의 집단군에 10개 항공연대를 보유하고 있고, 3개의 기계화 상륙사(여)단과 1개의 해병 육전여단을 편성 운용하고 있다. 장비 현대화와 관련해서는 2008년부터 차세대 장갑차(ZBD형)와 Z-10 공격용 헬기를 배치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최신형 전차(T-99)를 실전 배치하였다.

해군은 원해 작전능력의 강화를 위해 1995년부터 2007년 사이에 러시아로부터 소브레메니급 구축함(7,900톤) 4척과 킬로급 잠수함(3,000톤) 12척을 도입하였다. 아울러 JL-Ⅱ 탄도미사일(사거리 8,000km 이상)을 탑재한 신형 전략핵잠수함(Jin급) 2척을 2010년까지 전력화하였으며, 2017년까지 총 6척을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1998년 우크라이나에서 도입한 항공모함을 개조하여 2011년 8월부터 총 10차례 시험운항을 거쳐2012년 9월 25일 랴오닝함으로 정식 취역시켰다. 공군은 전투기 현대화를 위해 2010년 6월 12일부로 구형 전투기(J-6:중국산 MIG-19)를 도태시켰다. 스텔스 전투기(J-20)는 2011년 1월 11일 최초로 시험 비행한 이후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IL-76 수송기를 개조한 조기경보통제기(KJ-2000) 4대, Y-8 중형 수송기를 기초로 개발

5) 대한민국 국방부, 전게서, p.17.

HANSUNG UNIVERSITY

한 조기경보기(KJ-200) 4대를 전력화하였으며, H-6 폭격기를 개조한 공중급유기(H-6U) 10대를 보유하고 있다.[6)]

중국의 군사력은 질적인 면에서 미국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동북아지역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 보유국으로 부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제 및 군사력 증강과 함께 중국은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고 동남아 국가 연합인ASEAN, 상하이 협력기구, 6자회담 등 다자협력망을 구축하는 등 안보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탈냉전 이후 미국의 패권 또는 일방주의에 대한 대응과 동북아지역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견제하는데 이해의 일치를 보여 왔다. 이와 같은 중국과 러시아 관계의 강화추세는 2001년 부시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일동맹이 강화됨에 따라 지속되었다. 2005년에 후진타오 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양국이 유사시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사실상의 군사동맹조약을 체결하여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였다. 여기에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확대에 대한 대응, 국경지대의 병력감축, 러시아의 무기판매, 타이완 독립운동에 대한 후견세력의 확보, 중국붕쇄 가능성에 대한 대비라는 중·러간의 공동의 이해가 합치되기 때문이었다. 2005년 7월 후진타오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모스크바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하면서, 미국 주도의 일방주의적 행동을 견제하면서 국제질서에 대한 각국의 동등한 정치참여를 역설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중·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에너지협력, 우주무기공동개발, 미국적 가치 확산과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견제, 국제안보질서의 다극화 주장, 북한 핵문제 해결 모색 등 전 분야에 걸쳐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중국의 동북아 지역에서의 정치·경제·군사적 영향력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제 2 절. 미국 주도 동맹관계의 변화

미국과 일본은 냉전 시기 소련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여 동맹관계를 유지하였으나 탈 냉전기에 접어들어 양국의 목표였던 소련의 붕괴로 위협이 해소되자 미·일 동맹은 새로운 목표를 정립하지 못하고 이완 되었다. 그러나

6) 대한민국 국방부, 전게서, p.19.

HANSUNG UNIVERSITY

1990년대 중반 이후 양국은 동북아지역에서 안보환경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기 시작했다. 특히 북핵문제로 인한 한반도 긴장과 양안관계의 갈등 등 냉전적 요소가 잔존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부상하자, 미・일은 다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1995년 미국과 일본은 각각 '신 방위계획의 대강'을 수립하고 양국관계를 아태지역과 지구적 차원에서 동반자 관계로 표명하였다. 이에 기초해 양국은 1996년 '미・일 신 안보공동선언'을 하고 이듬해 1997년 '미・일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 개정안'을 체결함으로써 동맹관계를 제 정의하였다.

이러한 미・일동맹의 강화 추세는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더욱 가속화 되었다. 미국은 부상하는 중국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세력으로 부각시키는 한편 일본과의 동맹을 동북아전략의 요체로 강조하였다. 부시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은 2000년에 발표된 아미티지 보고서를 통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종교의 자유 등 공동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일본이 아태지역과 글로벌 차원의 안보문제에 적극적인 역할과 비용분담에 참여하기를 기대하였다. 고이즈미 정권의 등장 이후 일본도 역시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테러리즘 전쟁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을 적극 수용하는 한편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조치를 추진했다.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일본은 '테러대책 특별조치법'과 '이라크 지원 특별조치법', 그리고 유사관련 법제 등을 잇달아 제정하고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에 자위대를 파견함으로써 미・일 동맹을 공고히 하였다. 국내적으로도 일본은 전후 헌법 개정과 함께 집단적 자위권의 인정, 군사력증강을 위시한 보통국가화를 추진하고 있어 이를 위해 미・일 동맹을 강화하였다.

2005년 2월 미국과 일본의 외교, 국방장관회의인 2+2회의에서 양국은 공동 전략목표를 설정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미・일은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재편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로써 미・일 군사동맹은 상호 운용성이 강화되어 연합군 유사체제로까지 발전하고 있으며, 일본의 군사력도 첨단무기와 정보・통신력 및 기동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2011년 정치・경제・전략적 차원에서 '아・태지역을 중시하는 대외정책1'을 표방하고, 한국・일본・호주・필리핀・태국 등 5대 동맹국들과의 전

HANSUNG UNIVERSITY

통적인 안보협력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보다 효과적인 다자안보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경계감을 가지고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7)]

이상에서 보듯이 냉전기에 공산권으로부터의 위협을 억제하는 의미를 가졌던 미・일 동맹의 의의가 변화되어, 탈 냉전기에는 글로벌 레벨에서는 대테러리즘 전쟁을 미국과 더불어 수행하고, 동북아 지역에서는 세력균형 및 안정의 유지, 그리고 부상하는 중국의 잠재적 위협을 견제하는 의미로 재정의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은 동북아 지역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처하는 방향으로 동맹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미・일 동맹의 강화는 양국간에 일치된 공동목표와 함께 미국의 일본에 대한 역할 및 분담 요구와 일본의 국제적 역할 및 영향력 확대 추구라는 이해가 합치된 결과이다. 이처럼 일치된 이해관계에 따라 미・일 동맹은 강화되고 있으며, 동북아의 안보질서 형성에 커다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7) 대한민국 국방부, 전게서, p.13.

HANSUNG UNIVERSITY

제 3 장. 일본의 방위정책 변화와 군사력증강 실태 분석

제 1 절. 일본의 방위정책 변화

1) 기본 원칙

일본은 1957년 국방회의[8] 및 각의를 통하여 「국방의 기본방침」을 결정하였다. 이 방침에 의하면 미국과의 안보협력체제를 기조로 일본의 안전보장을 확립한다는 것이다. 즉, 일본에 대한 대규모 침략에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대처하고 소규모 침략에는 일본이 단독으로 대처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미국과의 안보협력체제」를 방위정책(防衛政策)[9]의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이 정책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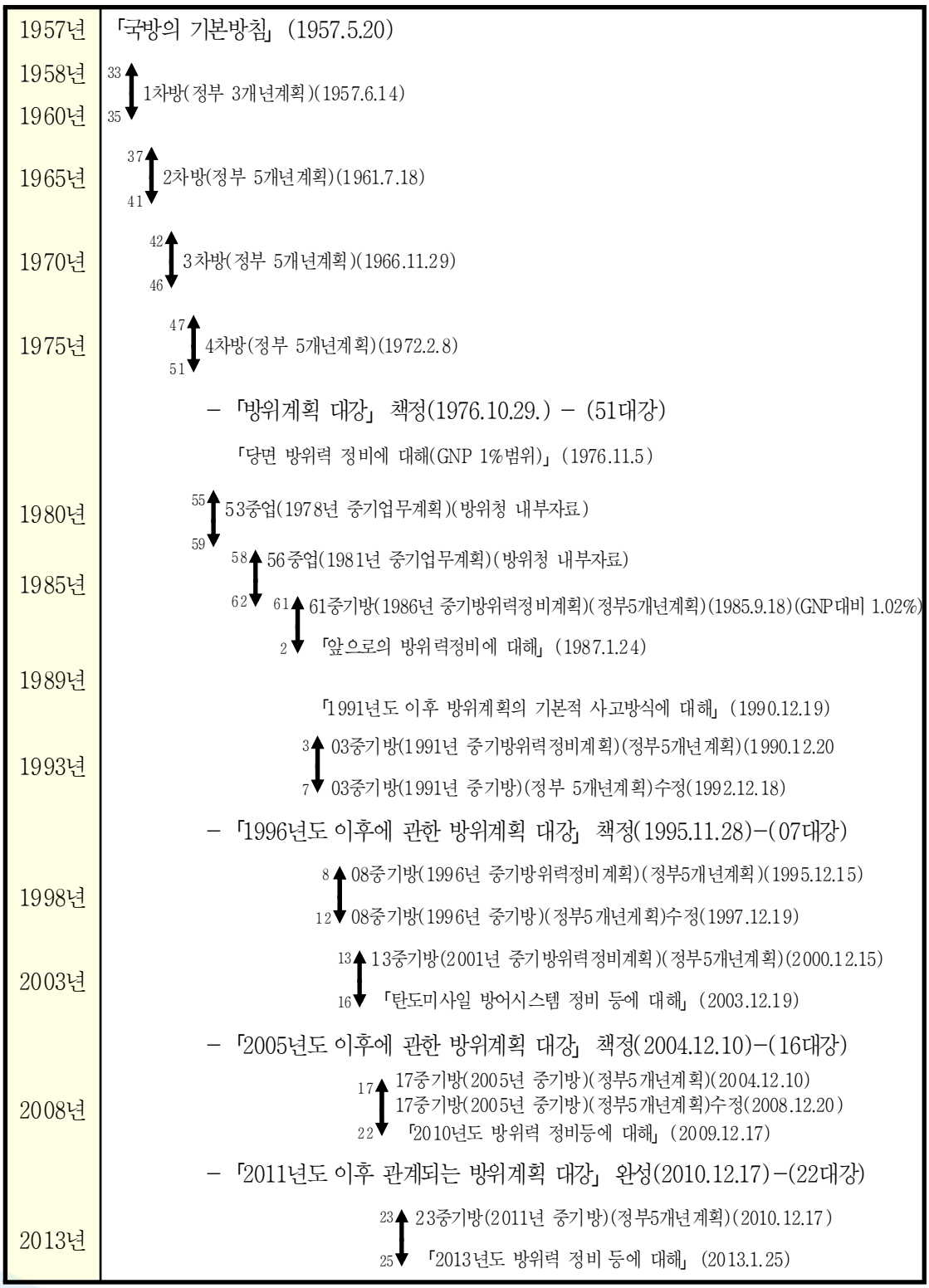
일본의 방위정책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1947년에 선포된 일본의 헌법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둘째, 1960년에 체결된 일본과 미국과의 안보조약을 견지하는 것, 셋째는 1945년에 만들어지고 1952년에 개정된 유엔헌장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3가지 요소에 기반을 두고 일본정부는 1957년에 '국방의 기본방침'을 만들었고, 이러한 방침에 따라 1976년 '방위계획대강(防衛計劃大綱)'을 채택하였으며, 1978년에는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만들었다. 그 후 냉전체제 붕괴에 따른 국제전략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1997년 '미・일 신 방위협력지침'을 제정하고, 1999년에는 '주변사태법'을 제정함으로써 자위대가 해외에 파병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었으며, 2004년 '신방위계획대강(新防衛計劃大綱)'을 통해 2005년 이후 방위력정비계획을 책정하였고, 2010년도에는 2011년도이후 관계되는 방위계획대강을 완성하였다.(<표 1> 참조) 이러한 일본의 방위정책의 변화는 먼저, 일본은 자국의 평화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스스로 규정하는 사태에는 어디든 합법적으로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역분쟁에 자위대가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리고 나아가서 지역분쟁에 대처하기 위한 전력구조로의

8) 1986년에 안전보장회의로 기능이 계승되었다.
9) 방위란 안전보장 속에 포괄적으로 함축될 수 있는 용어로서 안전보장의 군사적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방위는 국방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때는 방위(防衛)를 국가방위의 준말로 보는 것이다. : 민병천. (1986). 한국방위론, 서울: 고려원, p.278.
10) 이원덕. (2002). 「전후 일본의 안보정책」, pp.154 ~ 158.

HANSUNG UNIVERSITY

전환명분을 획득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표 1> 일본 방위력 정비계획 추이



출처 : 국방정보본부. (2013. 12). 「2013년 일본방위백서」, p.169.

가) 전수방위(專守防衛)

전수방위란 "상대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하고, 방위력 행사 형태도 자위를 위한 최소한에 한하며, 보유 방위력도 자위를 위해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는 등, 헌법 정신에 입각한 수동적인 방어전략 자세를 말한다"[11] 라고 1970년 나카소네(仲曾根) 전 일본수상이 방위청 장관으로 재직 시 처음으로 방위백서에 사용하였다. 이는 원칙적으로 침공하는 적을 일본영토의 영해 및 영공 내에서 격퇴하는 수세적 방어개념으로 여기에는 핵(核)을 포함한 항모, 전략폭격기 등 공격용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개념을 포함한다. 그러나 22대강은 ① 일본 주변에 여전히 핵전력을 포함한 대규모 군사력이 존재하며, 많은 국가가 군사력을 현대화하고, 또한 각종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점, ② 군사과학기술 등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징후가 나타나고부터 사태의 발생까지의 시간이 단축되는 추세에 있어 빈틈없이(seamless)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③ 많은 안전보장문제는 국경을 초월하여 확산되므로 평소부터 각국과 연계·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환경에서는 군사력의 역할이 다양해지고 평소부터 상시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운용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책정된 것이다.

이 때문에 22대강은 향후의 방위력에 대해서 '방위력의 존재'를 중시한 종래의 '기반적 방위력 구상'에 의거하지 않고, '방위력의 운용'에 초점을 맞추어 주어진 방위력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능동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동적인 것'으로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22대강에서는 즉응성, 기동성, 유연성, 지속성 및 다목적성을 갖추고, 군사기술 수준의 동향을 바탕으로 고도의 기술력과 정보능력을 보유한 '동적 방위력'을 구축한다고 밝히고 있다.[12]

나) 비 군사대국화

"일본이 타국에 위협을 주는 군사대국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위를 위해 규정된 필요 최소한도를 넘어 강대한 군사력을 보유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라는 원칙이다. 그러나 타국에 위협을 줄 정도의 군사력이 과연 어느 정도

11) 국방정보본부, 전게서, p.161.
12) 상게서, p.172.

HANSUNG UNIVERSITY

의 규모인지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 곤란하고, 객관적인 기준 설정의 곤란은 주관적인 해석과 판단에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다.

다) 비핵 3원칙

비핵 3원칙이란 핵무기에 대한 일본의 3가지 기본정책, ①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않고, ② 제조하지도 않으며, ③ 들여오지도 않겠다는 것으로, 1967년 12월 사토(佐藤) 총리가 국회 답변에서 밝혔다. 그러나 오키나와 미국기지의 반환 무렵 미군기지에서 보유한 핵무기가 문제화되자. 1968년 국회답변에서 일본정부는 비핵 3원칙에 덧붙여 비핵 4원칙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① 핵무기의 폐기 및 절멸(絶滅)을 목표로 한다. ② 현재로서는 실행 가능한 핵군축을 추진한다. ③ 국제적인 핵 위협에 대해서는 미・일 안보조약에 기초한 미국의 핵 억지력에 의존한다. ④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최우선 정책으로 적극 추진한다. 등으로 핵 부정의 인상을 좀 더 완화한 것이다.

그러나 1971년 11월 오키나와 반환협정 가결 무렵 중의원 본회의에서 비핵 3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비핵무기 및 오키나와 미군기지 축소에 관한 결의' 가 채택되었다. 또한 1976년 핵 확산 방지조약(NPT :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을 일본이 비준함으로서 국제법상의 의무가 되었다. 그러나 핵을 들여오지 않는다는 것은, 미일 안보조약의 사전협의 발의권이 미국에 있고 일본은 기지 및 함정・항공기에 대한 현장검사의 권한도 갖고 있지 않으므로 그 관철에 의문의 여지가 있으며, 또한 3원칙에 의거하여 핵 무장한 함선의 영해 통과에 대한 거부여부도 문제시 되었다. 일본은 현재 비핵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비핵국가로 공인받고 있으나, 핵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13]

라) 무기금수 3원칙

무기금수 3원칙은 1967년 4월 일본중의원 예결위원회에서 당시 사토(佐藤) 수상이 언급한 내용이 정책화된 것으로 평화국가로서 일본은 무기 수출에 의해 국제분쟁을 조장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① 공산국권제국에 대한 경우,

13) 합동정보본부. (2005). 「일본 방위백서」, 서울: 합동정보본부

HANSUNG UNIVERSITY

② UN결의에 의해 무기 등의 수출이 금지되어 있는 국가에 대한 경우, ③ 국제분쟁 당사국 및 그러한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한 경우에 무기 수출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힌 원칙으로 무기는 물론 무기에 관한 기술도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미・일 안보체제의 효과적인 운용에 기여하고 일본의 안전보장에 보탬이 되며, 미・일 양국간의 공동기술 연구를 통해 공동으로 개발・생산하도록 할 경우에는 엄격한 수출관리를 실시한다는 전제로 무기수출 3원칙 등에 따르지 않도록 하고 있다.

마) 방위비 GNP 1% 제한

1970년대 들어 미・중관계가 정상화 되는 등 국제정세의 변화와 방위력 증강에 따른 국내여론 및 야당의 반발 등은 방위력의 양적인 한계를 요구함에 따라 1976년 11월 국방회의 및 내각에서 "방위력 정비의 실시에 있어 각 년도의 방위관계 경비 총액이 당해연도 GNP의 1%를 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이를 실시한다". 라고 결정하였다.[14] 그러나 이와 같은 결정은 1986년 나카소네(仲曾根) 내각 당시 1%를 초과하여 편성함으로써 원칙자체가 유연해 졌으며, 1990년대 들어 세계 각국이 탈냉전에 따른 군축논의를 활발히 전개하면서 군비축소를 추진하자 표면적으로는 GNP 1% 이내로 방위비를 책정하였으나, 실제로는 4조엔을 돌파한 후 꾸준히 증가하여 1998년에는 5조엔에 육박하고 있고, 특히 일반회계 대비 방위비의 점유율은 6%대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 이후 일본 방위예산의 추세를 살펴보면 2002년 이후 계속 감소추세에 있으나 북핵사태・유가(油價)인상 등에 따라 감소폭은 크게 둔화되었고, 특히 북한 및 중국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 BMD(ballistic missile defense, 탄도 미사일 방위)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003년부터 감소 되었던 일본의 방위비는 실질적으로 11년만에 증액하였고 일본의 최근 방위비 추이는 <표 2>와 같으며, 2009 ~ 2013년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가의 국방비 추이는 <표 3>에서 보듯이 중국, 러시아의 국방비는 매년 10 ~ 20%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14) 정광하. (1989). "일본방위정책의 이상과 현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HANSUNG UNIVERSITY

<표 2> 일본의 최근 방위비 추이

단위 : 억 엔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방위예산(억￥)	47,741	47,903	47,752	47,138	47,538
증가율(%)	△0.1	△0.3%	△0.3%	△1.3%	△0.8%
재정대비(%)	5.39	5.19	5.17	5.22	5.13
GDP대비(%)	0.936	1.008	0.987	0.983	0.960

출처 : 국방정보본부. (2013. 12). 「2013년 일본방위백서」 , p.515.

<표 3> 각국 국방비 추이(2009년 ~ 2013년)

연도 / 국가명	2009	2010	2011	2012	2013
일본 (억 엔)	47,028 47,741 △0.8% △0.1%	46,826 47,903 △0.4% △0.3%	46,625 47,752 △0.4% △0.3%	46,453 47,138 △0.4% △1.3%	46,804 47,538 △0.8% △0.8%
미국 (백만 달러)	636,742 **△7.1%**	666,703 **△4.7%**	678,064 **△1.7%**	650,851 **△4.0%**	637,443 **△2.1%**
영국 (백만 파운드)	40,246 △4.3%	39,461 △2.0%	38,000 △3.5%	34,500 △7.2%	36,300 △5.2%

HANSUNG UNIVERSITY

<표 3> 각국 국방비 추이(2009년 ~ 2013년)

연도 / 국가명	2009	2010	2011	2012	2013
독일 (백만 유로)	31,179 △5.9%	31,111 △0.2%	31,549 △1.4%	31,872 △1.0%	33,258 △4.3%
프랑스 (백만 유로)	37,339 △1.3%	37,145 △0.5%	37,421 △0.7%	38,001 △1.6%	33,164 △0.4%
러시아 (억 루블)	12,160,359 △26.7%	12,570,141 △3.4%	15,170,906 △20.7%	18,465,847 △21.7%	21,064,62 △14.1
중국 (억 위안)	4,729 △15.4%	5,191 △9.8%	5,836 △12.4%	6,503 △11.4%	7,202 △10.7%

1. 자료는 각국 예산서, 국방백서 등을 따랐다.
2. % 표시는 전년도 대비 증가율 이다.
3. 미국 국방비는 2013년 Historical table에서 협의의 지출액. 2010년도 수치는 추정액.
4. 2011년도까지의 영국 항목 수치는 영국 국방부 공표 「UK Defence Statistics2012」에 따른 실적이다. 2012년도와 2013년도 이후는 예산교서에 따라 당시 책정된 예산이다.
5. 중국 항목은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의 재정보고에 따랐다.
6. 일본 항목의 상단은 SACO관계비용(2009년도 : 112억 엔, 2010년도 : 169억 엔, 2011년도 : 101억 엔, 2012년도 : 86억 엔, 2013년도 : 88억 엔) 및 미군 재편 관계비용 가운데 지방 부담 경감분(2009년도 : 602억 엔, 2010년도 : 909억 엔, 2011년도 : 599억 엔, 2013년도 : 646억 엔)을 제외한 것이며 하단은 이를 포함시킨 것 이다.

HANSUNG UNIVERSITY

출처 : 국방정보본부. (2013. 12). 「2013년 일본방위백서」, p.516.

HANSUNG UNIVERSITY

2) 방위정책의 변화

가) 냉전시대

1차 세계대전 패전 후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적인 골격은 1946년 제정된 평화헌법과 1951년 미국과 체결되어 1960년 대폭 개정된 미·일 안보조약에 의해 정해졌다. 이에 따르면 일본의 외교 안보정책은 첫째, 방위 목적에 한정된 군사력의 유지 및 점진적인 증강 둘째, 미국과의 군사 동맹관계 유지라는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 전쟁의 체험과 평화헌법의 구속으로 인해 군사력의 확충을 통한 안전보장에의 접근에 일정한 제약이 작용하여 왔다. 즉 1950년대부터 1970년 중반에 걸쳐 군사적 안보정책에 대한 각종의 제약이 제도화되어 군사면에서의 역할 수행에는 일정한 한계를 지니게 되었다.[15]

(1) 일본 평화헌법 제정 및 국방백서 발간

1946년 11월 평화헌법 제정 시 부터 1970년대 이전까지는 최초 평화헌법이 의도한대로 평화적인 안보정책을 추진하였다고 볼 수 있다. 평화헌법 제정 시에는 '자위권 발동으로서의 전쟁'을 포함하여 일체의 전쟁이나 군비를 포기한다는 것이 정부의 해석이었으나,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구상의 변화와 한국전쟁으로 1950년 7월 경찰예비대가 창설되고 이어서 1954년 방위청이 설치되어 자위대가 창설되자 일본의 명실 공히 자체 군사력을 보유하게 되었다.[16]

일본 정부는 반전평화사상의 국민감정을 고려하여 자위대가 '전력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헌법 제 9조에 대한 정부의 견해'라는 소위 해석개헌을 하여 주권국가로서 최소한의 자위 개념을 내놓았다. 즉, 1954년 이래 일본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헌법 제 9조에 대한 견해는 크게 다섯 가지이다.[17]

첫째, 일본이 헌법상 보유할 수 있는 자위력은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것이어야만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적 무기 가운데에서도 성능상 오직 상대국가 국토의 치명적인 파괴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이른바 공격적

15) 이원덕. (2003). "탈냉전과 일본의 신안보정책", 「안보연구회 발표논문」, p.2.
16) 엄수현. (1994). 「일본군사」, 서울: 시사일본어사, pp.142 ~ 152.
17) 국방정보본부, 전게서, pp.157 ~ 158.

HANSUNG UNIVERSITY

인 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바로 자위권을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초월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들어, 대륙간 탄도유도탄(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장거리 전략폭격기, 공격형 항모 등 공격무기의 자위대 보유는 허락되지는 않는다.

둘째, 헌법 9조에 입각하여 자위권 발동의 세가지 요건으로 ① 일본에 대한 긴급하고 부당한 침해가 발생 할 것. ② 이러한 경우 이를 배제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수단이 없을 것. ③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행사에 그칠 것 등의 세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셋째,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리적인 범위는 반드시 일본의 영토 및 영해, 영공으로 한정되지는 않으나, 해외파병은 헌법상 허락하지 않는다.

넷째, 집단적 자위권은 주권국가로서 국제법상 인정되나 헌법 제 9조는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다섯째, 자위를 위한 교전권은 인정된다고 본다.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인정되고 있으나, 상대국 영토의 점령 등은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를 초월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일본정부는 방위청이 설치되고 자위대가 창설된 지 2년 만인 1956년 7월에는 국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서 내각에 '국방회의'라는 상설기구를 설치하였다.

'국방회의'는 1957년 5월 20일 '국방의 기본방침'이라는 전후 일본 최초의 방위정책을 확정하였다.[18] 주요내용은 ① 국제연합의 활동지지, ② 국가안정에 필요한 기반의 확립, ③ 국력과 국정에 따라 방위력을 점진적으로 정비, ④ 외부침략에 대해 국제연합의 지지가 가능시까지 미·일 안보체제를 기초로 대처한다는 것 등이다.

그리고, 1957년 4월 사또오(佐藤) 총리가 '무기수출 3원칙'을 발표하였고, 1968년 11월에는 '전수방위'(專守防衛) 개념이 채택되어 1970년에 방위백서를 최초로 발간하면서 이를 명시하였다.[19]

18) 국방정보본부. (1996), 「일본의 신방위 정책」, 서울: 국방정보본부, p.3.
19) 서영석. (2004). 「일본의 유사법제」, 서울 :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p.5.

HANSUNG UNIVERSITY

(2) 방위계획대강 발표

일본은 1976년 이후 방위력 증강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방위계획대강'을 발표하였다. 방위계획대강은 이전의 정비계획과 같이 일정기간 동안의 정비 내용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방위력의 유지 및 그 운영을 포함하여 차후에 일본의 방위력이 지향해야 할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일본을 포함한 주변지역 정세 및 국내정세가 당분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기본적인 상황을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미·소간 핵의 상호억제를 통한 군사균형과 국제관계 안정화의 노력에 의하여 전면적인 충돌이나 이를 불러일으킬 위협이 있는 대규모의 무력투쟁의 발발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20]

1976년 10월에 채택된 방위계획의 대강에는 이른바 '기반적 방위력'[21] 의 개념이 도입 되었는데 그에 따르면 일본의 방위력은 한정적 소규모 침략까지의 사태에 대해서 유효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적인 것을 목표로 정비해 가고 그 이상의 사태에 대해서는 미국의 협력으로 이를 배제한다는 것이다. 즉 '기반적 방위력' 구상은 미국에 의존하는 형태로서의 전수방위를 재확인 함과 동시에 한정적인 군사위협에 대해서만 독자적인 힘으로 대처한다는 제한된 안보정책 개념으로 채택된 것이었다.[22]

이를 전제로 일본이 보유해야 할 방위력에 대해서는 ① 방위상 필요한 각종 기능을 갖추고, ② 후방지원체제를 포함하여 그 조직 및 배치에 있어서 균형있는 태세를 보유하는 것을 주안으로 하여, ③ 이로써 평시에 충분한 경계태세를 취할 수 있으며, ④ 제한적이고 소규모의 침략 사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능하며, ⑤ 나아가 정세 변화가 발생하여 새로운 방위력 태세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활하게 이러한 태세로 이행할 수 있도록 배려된 것으로 한다고 밝혔다. 기반적 방위력 구상은 일본에 대한 침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둔 억제효과를 중심으로 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23]

---

20) 이병숙. (2010) "일본의 군사력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의대학교, p.8.
21) '기반적 방위력'은 재래식 무기에 의한 침략에 대하여 최소한의 대응조치가 취해지는 것으로 타국에 위협을 주지 않고, 타국이 알보지 못할 정도의 적정규모의 방위력을 말한다. 엄수현, 전게서, p.425.
22) 이원덕, 전게논문, p.3.
23) 국방정보본부. (2013), 전게서, p.170

HANSUNG UNIVERSITY

(3) 미·일 방위협력지침 체결

1976년 베트남의 공산화 및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등으로 공산주의 확장에 대응한 미국의 대(對)소련 봉쇄정책의 일환으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1980년대 초부터 본격적인 자위대의 증강을 도모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당시 나카소네(中曾) 총리가 주도하는 일본의 '민족주의적 국력확대' 정책과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미국 건설'정책이 어우러진 결과로써 1978년 11월 '미 · 일 안전보장협력소위원회'(U.S-Japan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SCC)에서 체결된 '미·일 방위협력지침' 이다.[24]

현재까지 유효한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내용은 ① 일본이 침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태세로써 우선적으로 자위에 필요한 적절한 방위력을 보유해야 함을 강조함과 더불어 주일미군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군사력을 확보토록 한 것이며, ② 일본에 대한 한정적이고 소규모의 무력 공격시는 자체역량으로 격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시는 미국의 지원을 기다리는 것이며, ③ 작전 구상으로는 일본은 미국과 공동으로 일본 역내는 물론 주변 해상교통로까지 공동작전을 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실질적인 '미·일 공동작전계획'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자위대의 역할 증대'와 직결되어 있어 헌법 제9조의 위반이라는 논란이 되기도 했다.[25]

나) 탈냉전시대

1990년대 이후 일본은 과거 냉전시대에 유지해 왔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대외정책의 굴레를 벗어 던지고 점차 국제사회에서 군사, 안보적 역할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대외정책 측면에서의 국가진로 전환은 한편으로 냉전의 종결에 따른 국제질서의 새로운 재편모색이라는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의 측면을 띠고 있음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차제에 평화헌법을 비롯한 법제적 제약 속에 묶여 있던 전후 일본의 국가체제를 전면적으로 재편하여 새로운 진로를 설정하려는 나름의 계산된 의도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외·안보정책의 전환을 통해 일본이 추구하고 있는 국가목표는 이른바 군사적 보통국가의 실현으로 요약할 수 있

24) 서영석, 전게서, pp.208 ~ 214.
25) 국방정보본부. (1996), 전게서, pp.4 ~ 5.

HANSUNG UNIVERSITY

다.[26]

(1) 신(1995・2004・2010년) 방위계획 대강 발표

1995년에 책정된 방위계획 대강은 냉전종결이후 일본의 안전보장 정책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핵심적으로 중요한 문서라 할 수 있다. 이 대강은 1978년 미키 내각하에서 책정되어 지난 20년간 일본 방위정책의 지침 역할을 수행해 왔던 「방위계획의 대강」을 수정하여 미・소냉전의 종식이라는 전혀 새로운 국제정세하에서 일본이 추구해야 할 안보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신방위대강에서는 일본 자위대의 역할에 대해서 자위대의 본래의 '일본의 방위'와 더불어서 '대규모 재해 등 각종사태에의 대응' 및 '보다 안정된 안보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공헌'이라는 두 가지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27]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동북아지역에서의 국지적 지역 분쟁의 발생가능성 증대와 미국으로부터 안보지원의 불확실성, 미국의 지역안보 역할로부터의 점차적인 이탈 등에 대비하여 종전의 한정적이며 소규모의 침략에 자력으로 대처 가능한 방위력 수준에서 벗어나 국지적 분쟁 발생시 이에 독자적으로 대처 가능한 방위력을 정비하고 더 나아가 보다 안정된 동북아지역의 안보환경 조성에 일본의 군사력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004년에 책정된 방위계획 대강은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의 확산 진전, 국제테러 조직의 활동 등 새로운 위협 및 다양한 사태에 대한 대응이 과제가 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일본의 안전보장 및 방위력의 방향성에 대해 새로운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책정되었다. 이 방위계획 대강은 ① 일본에 직접적인 위협이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 위협이 미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제함과 동시에 피해를 최소화 시킬 것. ② 국제적인 안전보장 환경을 개선하여 일본에 위협이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등의 2가지를 안보목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 자신의 노력', '동맹국과의 협력', '국제사회와의 협력'이라는 3가지 접근을 통합적으로 조합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방위력 향상에는 방위력의 존재에 의한 억제효과를 중시하는 기반적 방위력 구상의 유효한 부분을 계승하면서, 대처능력을 보다 중시하여 새로운 위협이나 다양한 사

26) 이원덕, 전게논문, p.1.
27) 상게논문, pp.14~15.

HANSUNG UNIVERSITY

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기능적이며 탄력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방위력'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28]

2010년 12월에 책정된 방위계획 대강은 ① 일본 주변에 여전히 핵전력을 포함한 대규모 군사력이 존재하며, 많은 국가가 군사력을 현대화하고 또한 각종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점. ② 군사과학기술 등이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징후가 나타나고부터 사태의 발생까지의 시간이 단축되는 추세에 있어 빈틈없이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③ 많은 안전보장 문제는 국경을 초월하여 확산되므로 평소부터 각국과 연계·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환경에서는 군사력의 역할이 다양해지고 평소부터 상시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운용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책정된 것이다. 이 때문에 향후 방위력에 대해서 '방위력의 존재'를 중시한 종래의 방위력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능동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동적인 것'으로 구축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서 즉응성, 기동성, 유연성, 지속성 및 다목적성을 갖추고, 군사기술 수준의 동향을 바탕으로 고도의 기술력과 정보능력을 보유한 '동적 방위력'을 구축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동적방위력의 개념은 자위대의 활동을 통해 방위력의 역할을 다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데 특징이 있다.[29]

(2) 미·일 신(新)안보공동선언

냉전종결 이후 일본의 변화된 안보정책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는 1996년 4월의 미·일 신안보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선언을 통해 일본은 기존의 미·일안보체제를 더욱 심화, 확대시킴으로써 대미군사동맹 노선을 굳건하게 나간다는 방향을 정립하였다. 신 안보선언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일본이 철저히 협력하기로 약속한 것에 다름 아니다. 즉, 냉전종결과 함께 미·일 양국의 일부에 제기되어 온 미·일안보 회의론과 무용론의 도전에 쐐기를 박음과 동시에 일본이 냉전종결 이후에도 미국과의 공고한 군사동맹을 통해 안보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대외에 천명한 것이다. 또한 신 안보선언에서는 미·일안보 체제가 동아시아의 대소 군사동맹으로서 의미를 넘어서서 아태지

28) 국방정보본부. (2013), 전게서, pp.171 ~ 172.
29) 상게서, p.172.

HANSUNG UNIVERSITY

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긴밀한 미・일 군사협력을 추진하는 발판의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규정하고 있다. 즉 신 안보선언은 미・일안보체제의 광역화와 이에 따른 역할 분담을 명시한 것이다. 이로써 일본은 극동의 유사는 물론이려니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유사상황에 전개될 경우, 전개될 미군의 작전에 적극적인 협력을 제공할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30]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정치, 군사적으로 일본의 역할을 확대시키면서도 미국의 세계전략 수행에 일본의 보조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고, 일본 역시 안정과 번영을 좌우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미국과의 관계강화를 통해 자국의 안보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담겨진 것이 안보공동선언의 내면적인 배경이다.

신 안보공동선언은 "21세기를 향한 동맹(Alliamce for the 21st Century)"이란 부제를 붙여 9개조로 구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31] ① 양국정보는 1년 이내로 변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정치 및 안보정세와 양국간 안보관계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집중적인 검토를 하였다. ② 지역정세를 분석해 볼 때 냉전 이후 세계적인 무력분쟁 발생 가능성은 감소하고 있고, 제국가 간에 정치 및 안보대화가 확대되고 있다. ③ 양국 정상은 미・일 안보조약을 기반으로 양국 간 안보관계가 공동의 안전보장 상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21세기를 향해 동북아지역에서 계속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기초임을 재확인 하였다. ④ 극히 중요한 안보면에서 관계의 신뢰성을 강화할 것을 목적으로 진행 중인 탄도미사일 방위에 관한 연구 등, 현안문제에 대한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⑤ 미・일 안보체제의 중추적 요소인 미군의 원활한 일본주둔에 광범위한 일본국민의 지지와 이해가 불가결한 것을 인식했다. ⑥ 중국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다하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양국은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가기로 관심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한반도의 안정이 미・일 양국에 있어서 극히 중요하다는 것에도 유의하며 그를 위해서 양국이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해갈 것을 재확인 하였다. ⑦ 평화유지활동이나 인도적인 구호 활동 등을 통해 국제연합 기타 국제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30) 이원덕, 전게논문, pp.15~16.
31) 극동문제연구소. (1996). 「극동문제」, 1996년 제 1월호, pp.148 ~ 153.

HANSUNG UNIVERSITY

했다.

상기와 같은 미・일 신(新)안보공동선언은 미국이 일본을 '동북아 더 나아가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역할을 분담할 동맹국'의 위치인 '대등한 관계'로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일본은 미국의 이러한 선택을 지렛대로 동북아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 내에서도 책임의 증대만큼 권리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론은 보도하였다.[32]

실제로 일본은 자위대의 활동영역 확장과 경제대국에 걸 맞는 군사력을 통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실리를 얻은 것이다.

1966년에 발표한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내용 중의 하나가 1978년에 작성한 '구(舊)방위협력지침'의 개정이다. 즉, '신안보공동선언'의 5-b항에서 미국과 일본은 유사시 공동작전계획의 골격을 이루는 '구(舊)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탄생된 것이 '신(新)방위협력지침'이다.

미국과 일본은 1966년 6월부터 '미・일 방위협력소위원회'(SDC)[33]를 보강하여 '구방위협력지침'에 대한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1997년 9월 23일 뉴욕에서 미국 측의 울브라이트(Albright) 국무장관, 코인(Coin) 국방장관과 일본 측의 오부치(小淵) 외상, 이시바(石波) 방위청 장관이 참가한 '미・일 안전보장협력소위원회'(SCC)를 개최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신방위협력지침은 평상시 행하는 협력과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 시 행동, 그리고 일본 주요 지역에서의 사태에서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사태 시 협력등에 관해 다음과 같은 주요내용을 제시하였다.

평상시 협력사항은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작전계획과 주변사태시 상호협력계획에 관한 검토를 포함한 공동작업을 위해서는 포괄적 매카니즘을, 긴급사태에 있어서는 조정 매카니즘을 평소부터 구축해 나

32) 김창균. (1996). "미・일 신안보선언", 「조선일보」, 4월 16일자, p.10.

33) SDC는 미・일 안전보장협의 위원회의 하부기구로서 설치목적은 긴급시 미군과 자위대의 적합한 공동대처활동을 확보하기 위해 취해야 할 지침 등 미・일간의 DIDP 관한 연구를 협의하는 기능을 담당하는데 있으며, 1994년 6월 미・일 차관급 협의로 개조하였다. 국방정보본부, 「일본의 방위백서」(서울 : 국방정보본부, 1998), p.179

HANSUNG UNIVERSITY

간다[34]는 것 등이다.

일본이 유사시 협력내용은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임박할 경우, 실시된 경우, 무력공격시 작전에 연계된 제반활동으로 구분하였고 무력 공격시에는 "자위대와 미군은 긴밀한 협력 하 에서 각각의 지휘계통에 따라 행동하고, 효과적인 공동작전 수행을 위해 역할분담의 결정이나 작전행동의 정확성 확보 등을 위한 절차를 미리 정하여 놓는다"는 것 등이다.

주변 사태 시 협력은 주변사태가 예상될 경우와 발생한 경우로 구분하였고 발생한 경우에는 "구원 활동과 피난민의 대응을 위한 조치, 수색 및 구난 활동, 비전투원을 대피시키기 위한 활동, 국제평화와 안정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 경제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해서는 각국의 판단 하에 주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협력한다."는 것 등이다.

상기와 같은 신방위지침의 특징으로는 ① 구 방위협력지침은 일본 유사사태에 중점을 둔 반면, 신 방위협력지침은 주변유사시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35] 즉, 이것은 방위협력의 적용범위가 극동지역에서 아·태 지역으로 더욱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 ②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실시된 경우에는 역할분담의 방식에 있어 일본이 주도적으로 침략을 배제하고, 미국은 이를 지원하는 것이다. ③ 유사시 방위협력의 계획과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시키고 있다. ④ 주변사태에 대한 개념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⑤ 조정기구를 평상시부터 구축하여 유사시 즉각 가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표현되는 일본의 1990년대는 개혁과 재편의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 시대였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추구된 일련의 개혁이 추구하였던 목표는 21세기 새로운 일본의 구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이러한 변화 움직임은 일본 내

34) "포괄적 매카니즘"이란 자위대와 미군 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기관의 관여를 얻어 유사시 공동작전계획 및 주변국과의 상호협력계획에 관한 검토, 준비를 위한 공동기준과 실시요령을 확립하기 위해 포괄적인 장치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SCC가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조정 매카니즘"이란 미·일 관계시관의 관여하에 긴급사태 발생시 의견조성 및 지휘작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조정기구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자위대와 미군에서는 이 조정 매카니즘의 일환으로 쌍방의 활동에 관해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갖춘 미·일 공동 조정소가 구성되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5) 권호연. (1997). "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본 일본 방위정책의 변화", 「동북아 지역안보와 일본의 역할」, 성남: 세종연구소, p.2.

HANSUNG UNIVERSITY

외로부터 명치혁명과 전후개혁에 비견되는 제 3의 개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전보장 분야만 보더라도 90년대 이후 기존의 안보정책과 비교해 볼 때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변화가 초래되었다.

자위대의 PKO참여와 가이드라인의 개정, 주변사태법의 제정 등으로 표출되고 있는 일본 안보정책의 새로운 전개는 급기야 평화헌법 개정 논의로까지 그 외연이 확장되고 있다. 냉전체제하에서 대외적 군사역할을 최대한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해 왔던 일본은 90년대 이후 안보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은 기존의 소극적인 안보정책을 탈피하여 안보면에서의 국제적 역할을 능동적으로 추구해 나가기 위한 행보를 모색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전후 유지해왔던 평화국가의 외피를 벗어 던지고 군사적 보통국가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36]

이러한 일본의 적극적인 안보정책 변화는 중국의 군사력증강을 부추김은 물론 나아가 동북아시아 전체를 군비경쟁의 악순환과 지역패권의 대결구도로 빠트릴 위험성이 있다.

제 2 절. 일본의 군사력 증강요인

1) 국제적인 요인

먼저,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촉진시키는 국제적인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의 일본에 대한 군사적 역할증대 요구에 의한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 미국은 동아시아의 상황이 경제적 · 사회적으로 역동적이며 희망적인 반면에 군사적·정치적으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지역으로 핵강대국들의 이권경쟁이 치열하며, 많은 국가들이 핵무장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한반도와 대만, 일본 등지에서 언제든지 주요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미일관계의 공고화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20세기 '영미동맹'에 비교될 수 있는 동맹관계의 발전을 요구하는 것이다.[37] 따라서 미국은 동북

36) 이원덕, 전게논문, p.21.

37) 최운도. (2002). "일본 방위정책변화와 한반도의 안보," 한국국제정치학회 편, 『일본 대내외 정책의 현안과 쟁점』, 서울: 한국국제정치학회, pp.7 ~ 8.

HANSUNG UNIVERSITY

아에서 증가하는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력에 대처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일본의 방위력 증강을 통한 군사력 역할의 확대를 추구하여 왔다. 이러한 군사력 확대요구는 미·일간의 정상회담과 국방상 회담의 정례화, 공동훈련이라는 협조관계의 측면관계로 발전되어 왔으며, 방위비 분담의 측면에서 미·일 군사협력에 있어 일본을 어느 정도 재무장시켜서 일본에게 상당한 방위부담을 떠맡기려는 측면으로 발전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미군의 일본 주둔비의 추가 부담뿐만 아니라, GNP 1% 이상의 방위비 지출의 증대, 미국산 무기의 추가구입, 그리고 한반도 유사시 미군 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미·일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이하 :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한 일본의 역할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여 왔다. 위와 같이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일본의 역활증대라는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일본은 1997년 미·일 신방위협력지침(평시협력, 일본 유사시 공동대처, 주변사태시 상호협력 : 대미지원 40항목)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련법을 제정하였다. 미국의 세계적 군사전략 속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의 역할확대는 결국 앞의 방위력정비계획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군사력 증강으로 발전되어 왔듯이, 최근의 일련의 조치들은 미·일 안보동맹 틀 속에서 일단 유사시 미군을 지원하고 아시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제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군사력증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일본에게 새로운 부담이 되고 있는 중국의 군사적 동향에 기인한 군사력 증강이 이루어질 수 있다. 70년대 후 중국의 핵 및 비 핵 전력은 강대국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계속적인 군 현대화 추진과 해양중심의 군사력 확장, 핵무기 실험 등 군사적 위협의 증대와 미·일간에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TMD계획에 대한 반발과 센카쿠 열도 등 영토문제에 대한 갈등, 일본의 엄청난 수출입 물동량이 드나드는 해상수송로상의 남사군도 일부를 중국이 점령하여 자국의 영토화를 주장하는 등 중국의 국가정책 방향의 불확실성과, 다가오는 21세기의 정치, 군사적 비중증대 가능성은 일본 안보에 새로운 부담이 되고 있어, 중국의 군사적 동향에 대비하는 수준에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이루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대치상태의 지속과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을 일

HANSUNG UNIVERSITY

본 안보위협으로 고려하고 있다. 아직도 일본의 이익선으로 한반도를 보고 있는 일본은 북한의 모험적 군사적 도발에 의한 혼란이 일본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으며, 전략환경의 변화로 한반도가 가상적국으로 고려될 러시아, 중국 등 주변 강대국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38]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은 한반도의 위기발생을 국가안보의 위협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한반도 상황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군사력을 증강하여 왔다. 그 예로 지난 '98년 8월 31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시험발사(북측주장 : 인공위성 발사, 호칭명 : 광명성)에 따른 탄두가 일본공역을 지나간 것을 계기로, 북한은 오키나와를 포함한 일본전역을 사정으로 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일본정부는 98년 9월 1일 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여 정찰위성의 도입 및 전역미사일체제(TMD)검토를 골자로 하는 대처 방안을 수립하고, 전력증강계획에 반영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즉,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미치는 위협의 파장에 대한 대비태세와 미·일 안보체제의 틀 속에서 한반도 주변사태 발생 시 미군지원을 위한 일본의 역할요구에 부응하는 명목 등, 한반도 분단에 따른 각종 위기상황을 자위대 전력증강의 유리한 기회로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2) 국내적 요인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촉진시키는 요인 중 국내적인 환경요인으로는, 첫째, 일본의 방위정책을 둘러싼 환경은 탈냉전 이후 크게 변화되었다. 일본이 방위정책을 형성하는 근거로 활용해 온 미·일 안보체제가 종래 일방적 관계에서 쌍무적 관계로 변화되었다. 또한 종래 경제건설에 중점을 두어온 보수우익 세력들이 냉전이후 '보통국가(普通國家)'구현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같은 목표가 일반국민에게 이해되고 있다는 점이다.[39] 이른바 보수우익의 대중화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전후 일본의 지식계층과 노동자 사이에 확산되었던 좌익사상과 혁신적 정치세력이 상대적으로 쇠

38) 하정열. (1999). 「일본의 전통과 군사사상」, 서울: 팔복원, p.494.
39) 강한구·박민구. (1998). "일본의 보수우익이 방위정책에 미치는 영향분석",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pp.161 ~ 162.

HANSUNG UNIVERSITY

퇴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국민들이 보수우익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정계에 있어서는 사회당의 붕괴, 그리고 공산당의 안보문제에 대한 기존노선을 유보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방위정책에 대한 반대세력의 영향력은 대폭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외적인 환경면에 있어서 그간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강력히 반발해 왔던 한국이 일본의 안보정책을 양해하는 입장으로 선회하였고, 러시아와는 2000년까지 평화조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일본의 방위정책 강화에 주변국의 외교적 압력과 국민들의 거부반응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은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일본은 전후 그 유례가 없을 만큼 방위정책 강화에 있어 좋은 환경 하에 있으며, 그 주도 세력의 입지가 대폭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현행 헌법 하에서 집단자위권 문제, 해외파병 문제 등에 대한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이러한 문제 해결 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군사력 증강이 요구되는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다.

둘째,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 근대화와 군국주의 시대의 국가 중흥기의 성향으로 볼 때 국가 흥망성쇠의 주역을 군사력이 담당함으로써 개척자적 기여정신과 전통적으로 무인지배(武人支配)에 의한 국가발전에 기여했다는 인식의 증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무사주도하의 일관된 부국강병책(富國强兵策)의 역사가 유산으로 잠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사도 정신기반의 상무주의 사상(尙武主義 思想)이 오랜 기간동안 뿌리내린 가운데 외세 위협 등의 국내·외 위기 해소 수단으로서 군사력을 중시하고 이에 의존하는 적극 대처사상이 표출되어 왔다. 이같이 군사력을 중시하는 일본의 역사적 성향은 전후 국가체제 변화와 주변 여건에 따라 어떤 요인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도 일부 요인은 일본인의 의식 속에 깊은 역사적 유산으로 잠재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일본의 막대한 군사 잠재력 보유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 이미 걸프전에서 기술 집약형 군대가 인력 집약형 군에 비해 월등히 우세하다는 것은 입증된 바 있듯이 현재 배치되어 있는 일본의 무기나 장비만으로 일본의 군사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은 정확한 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 일본의 현 군사력은 비록 양적으로는 크지 않지만 질적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무기체계를 갖추

HANSUNG UNIVERSITY

어 가고 있고 또한 군사적 잠재력 측면에서도 일본은 경제기술대국으로써 현대전의 핵심요체인 과학기술능력은 세계최고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군수 산업분야에서도 전통적인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최신 기술 축적과 막대한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수준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증강을 단기간에 완성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즉, 1999년 기준 GNP의 약 1% 수준인 4조 9천억엔을 방위비에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위비 지출규모는 세계 3~4위 수준을 차지할 수준의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다. 만일 이러한 군사적 잠재력을 바탕으로 군사대국화를 정책적으로 지향하여 방위비 수준을 3.5% 수준으로 증액한다면 단기간 내 세계 2위의 군사대국(軍事大國)이 될 수 있다.

넷째, 자원의 높은 해외의존도에 따른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한 군사력증강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일본은 경제 및 기술 대국으로서 현대전의 핵심요소인 고도의 과학기술능력과 방대한 군수산업의 생산능력 등 막대한 잠재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한편 부존자원 빈약으로 인하여 자원에 있어서는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해상 교통로의 확보 는 일본의 사활이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로 볼 수 있다. 더욱이 2대 해양수로중의 하나인 남지나해는 중국과 대만의 해군력이 첨예한 대립 속에 증강 배치된 지역으로서 이 지역 안전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해·공군력의 증강에 주력할 것이 분명하다.

3) 군사력 증강의 억제요인

가) 국제적 요인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제약하는 국제적인 환경요인 중 우선 먼저 탈냉전후 일본은 소련붕괴 이후 북방의 군사위협이 크게 줄어들었다. 그간 일본의 안보환경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소련의 극동군사력 이었으며, 1970년대 이후 일본의 군비증강도 상당 부분 '소련 위협론'에서 명분을 찾았고, 실제 자위대는 제 1의 가상적으로 소련을 상정해 왔다. 그러나 소련자체가 소멸된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소련으로부터 전면적 위협은 크게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40] 따라서 적이 없는 현 상황에서 방위력증강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HANSUNG UNIVERSITY

둘째, 미군의 일본 군사력증강 요구에 대한 한계성이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안보전략상 일본의 군사력증강과 협력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일본의 전략에 의한 군사대국화는 반대하고 있으며, 어디까지나 대미 이탈을 불원하는 가운데 미국의 전략구도 내에서 보완적 성격의 군사력증강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군사력증강에 대한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41]

셋째, 주변국가의 반발에 의한 제약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아시아지역에서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 대한 개념이 각 국가간에 잠재하고 있는 현실하에서 일본의 위협적인 군비증강은 주변국으로 하여금 대일 정책강화는 물론 스스로 고립을 자초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나) 국내적 요인

첫째, 일본 헌법상의 제한요인이다. 1946년 제정된 '평화헌법 9조 1항'에는 '전쟁포기'를 '9조 2항'에는 '전력 불보유 및 교전권 부인'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① 자위목적의 필요 최소한도의 군사력 보유와 무력행사만 인정되고, ② 상대국을 치명적으로 파괴하기 위한 공격용 무기 보유는 금지하며, ③ 무력행사를 전제로 한 해외파병과 타국 방어목적의 자위권 행사도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된다.[42] 또한 방위정책상 헌법 9조를 이념으로 한 전수방위 원칙, 비군사대국화, 비핵 3원칙, 방위비의 GDP 1%이내 원칙 등을 채택하고 있어 적극적·공세적 방위전략 채택과 주변국에 위협이 되는 군사력 건설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둘째, 일본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외교적인 관심사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진출이 성사 될 때까지는 결코 중국이나 미국의 인심을 잃는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즉 세계 최강 수준의 재래식(在來式) 무기체계와 군사대국이 될 수 있는 군사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과의 패권경쟁, 미·일 동맹체제에 손상을 입히는 급격한 군비증강 추구는 제한될 것이다.

---

40) 1990년 이후 극동군 출격횟수는 년200회에서 년 86회로 현저히 감소하였고, 극동해군 잠수함 활동도 현격하게 감소하였음.

41) 서주석. (1992). "일본군사력의 평가", 「국방논집」, 제17호, 서울 : 국방부, pp.234 ~ 235.

42) 국방정보본부. (2007). "일본의 국가안보전략과 군사적 역량확대 추진동향", 서울: 국방정보본부, p.3.

HANSUNG UNIVERSITY

셋째, 국내의 정치적 요인 및 반대세력에 의한 제한이다. 일본의 방위정책 수립에는 일부 정치가 혹은 정부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여론, 정당, 관료, 재계에 의하여 형성되어 지고 있다. 일본이 외부의 침략을 방지하는 국방개념으로서의 군사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에는 대체적인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주변국들을 위협할 만한 수준으로서의 군사력건설은 국민 대다수가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연정복귀 이후 자위대의 합헌을 인정, 정책을 크게 전환하였던 사회당이 냉전시대의 안보정책으로 자위대의 임무를 엄격히 제한하는 '한정방위' 원칙을 새롭게 주장한 것에서 알 수 있다.[43]

제 3 절. 일본의 군사력 증강 실태

일본은 직접적인 침략을 미연에 방지하고, 침략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격퇴하며, 일본의 독립과 평화를 수호하는 것을 국방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있다. 일본은 헌법에 따라 전수방위 원칙을 견지하면서 문민통제를 확립하고 비핵 3원칙을 준수해 왔다. 일본은 2010년 「신방위대강」에서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주요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방위력 개념을 기반적 방위력에서 동적 방위력[44]으로 전환하였다. 동적 방위력 개념에 따른 전력증강은 기존의 러시아 위협에 대비한 북방 중심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비한 남서제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상전력은 기존 재래식 전력은 줄이는 대신 기동력과 도서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해상・공중 전력은 첨단 정밀무기에 의한 원거리 작전능력을 강화하는 등 선택과 집중의 개념으로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45]

1) 전력(戰力) 건설과 군사력 운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정비

일본은 자위대를 자국의 정식 군대(자위군)화하기 위한 헌법개정을 위해 「개헌 절차를 정한 국민투표법」을 통과('07년. 5월)시킴으로서 개헌을 가시

43) 국방정보본부. (1995). "세계의 군사동향", 서울 : 국방정보본부, p.15.
44)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즉응성, 기동성, 유연성에 중점을 두고 방위력을 운용한다는 개념
45) 대한민국 국방부, 전게서, p.16.

HANSUNG UNIVERSITY

화 하였다. 이에 앞서 '06년 12월에는 자위대법상 해외 활동을 '부수임무'에서 '기본임무'로 격상시키고 이듬해인 '07년 1월에는 국방조직의 정상화를 위해 「방위청 설치법」 개정을 통해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켰다. 이후 일본은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집단적자위권 행사 문제는 주요한 현안으로 다루어지지 않다가 2012년 11월 총선승리를 토대로 아베총리 내각이 헌법개정을 통해 자국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려 했으나, 2013년 7월 선거에서 개헌 정족수인 2/3(162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헌법개정이 아닌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자국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46] 2014년 4월 24일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일본방문시 집단적 자위권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15일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헌법 해석 변경이 이뤄질 경우 전쟁과 군대 보유 등을 포기한 평화헌법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며, '전수방위' 등을 원칙으로 해온 일본안보 정책의 일대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자문기구인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 간담회'가 집단자위권 헌법 해석 변경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것에 맞춰 정부 견해를 밝히는 기자해견을 열고 이러한 '해석 개헌'을 공식화 했다.[47]

현재 국제사회의 지지나 일본의 국내정치상황을 볼 때 아베 총리가 공식발표한 헌법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헌법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야당과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향후 강력한 군사력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정비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다.

2) 즉응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부대구조 개편

'05 ~ '09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 따라 육상자위대는 현 10개 사단과 4개 여단을 즉응성과 기동성을 강화한 9개 사단 6개 여단 체제로 개편하고, 해상자위대는 현재 8척의 호위함으로 편성된 4개 호위대군 체제 DDG/DDH/DD 등 4척으로 운용되는 8개 호위대로 개편하여 즉응성을 강화하고자 하고 항공

46) 유응조.(2014),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둘러싼 쟁점과 한국의 대응과제", 「이슈와 논점」, 서울 : 국회입법조사처, p.2.
47) 경향신문. (2014). "아베, 헌법 해석 바꿔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 공식화"

자위대는 1개 항공경계부대를 E-767 부대와 E-2C 부대로 분리, 운용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다. 이후 22대강(2011년~2015년)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 따르면 육상자위대는 평시 지역배치부대로 8개 사단, 6개 여단을 기동운용부대로는 중앙즉응집단과 1개 기갑사단을 지대공 유도탄 부대로 7개 방공포병군/연대로 편성하였다. 해상자위대는 호위함부대로 4개 호위대군(8개 호위대)과 4개 호위대를, 잠수함 부대로 6개 잠수함을, 소해부대로 1개 소해대군을, 초계함부대로 9개 항공대를 편성하였다. 항공자위대는 항공경계관제부대로 4개 경계군, 24개 경계대, 1개 경계항공대(2개 비행대)를, 전투기부대로 12개 비행대를, 항공정찰부대로 1기 비행대를, 항공수송부대로 3개 비행대를, 공중급유・수송부대로 1개 비행대를, 지대공유도탄부대로 6개 방공포병군을 편성하였다.[48] 탄도미사일 방어에 사용가능한 주요장비 및 기간부대로 이지스 시스템탑재 호휘함은 6척으로 기존보다 2척 증강되었으며 항공경계관제부대는 11개 경계군대로, 지대공유도탄부대는 6개 방공포병군으로 군 구조를 개편 및 증강시켰다.

3) 해・공군 중심의 첨단전력 건설

가) 육상자위대 : 즉응성・기동성 제고로 국제활동 확대 모색

육상자위대는 8개 사단과 6개 여단, 1개 기갑사단 및 중앙즉응집단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동적 방위력 개념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11~2015년 「중기방위력 정비계획」 기간 중, 전차와 화포의 수는 감축하고 남서지역에 연안감시부대와 초동조치부대를 배치하며, 효과적인 방공작전 수행을 위해 지대공 유도탄부대를 현재 8개 부대에서 7개 부대 체제로 전환하면서 성능이 향상된 지대공 유도탄을 배치하고 있다.[49]

일본 육상의 최고 무기인 10식 전차는 2010년에 전력화하여 운용중에 있으며 세계 각국 최고 수준의 전차와 성능은 거의 유사하나 경량화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부록#3 '전차, 주요 화기 등의 보유 수 및 성능제원', 부록#5 '주요 항공기 보유 수 및 성능제원', 부록#6 '유도탄 성능제원'을 참

48) 국방정보본부. (2013), 전게서, P.173.
49) 대한민국 국방부, 상게서, p.17.

HANSUNG UNIVERSITY

고하면 일본 육상자위대의 주요 무기종류와 성능을 알 수 있다.

<표 4> 육상자위대의 전력변화(1995년 ~ 2011년)

구 분	전(全)방위대강 (1995년 이후)	2004년 군사력	신(新)방위대강 (2004년 이후)	방위대강 (2011년 이후)
편 제	160,000명 (145,000+15,000명)	166,832명 (157,828+9,004명)	155,000명 (148,000+7000명)	154,000명 (147,000+7000명)
기간부대	8개 사단 6개 여단 1개 기갑사단 1개 공정단 1개 헬기단	10개 사단 3개 여단 2개 혼성군 1개 기갑사단 1개 공정단 1개 헬기단	8개 사단 6개 여단 1개 기갑사단 중앙즉응집단	8개 사단 6개 여단 1개 기갑사단 중앙즉응집단 7개 방공포병 / 연대
전 차	약 900대	976대	약 600대	약 400대
특과장비	약 900문 / 대	943문 / 대	약 600문	약 400문 / 량
화 포	45 / 47	8	-	-
대유도탄 공	2개군 / 0.25개군	0.25개군	-	-
전투헬리콥터	4 / 10(AH-1S)	88	-	-
수송헬리콥터	12 / 7(CH-47JA)	50	-	-

출처 : 세종연구소. (2004). 「2005년 이후의 일본 방위정책」 , p.17.
국방정보본부. (2013). "2011년 이후의 방위계획 대강", 「일본방위백서」 , p.494.

나) 해상자위대 : 해양감시 및 제해 능력의 절대적 우위 확보

해상자위대는 4개의 호위대군과 5개 지방대, 9개 항공대(고정익 5개, 회전익 4개)로 편성되어 있고, 주요 전투함정 48척, 13,500톤급 헬기탑재 호위함 2척, 잠수함 18척 등을 운용하고 있다. 2011~2015년 「중기방위력 정비계

HANSUNG UNIVERSITY

획」 기간 중 해상 방위력 증강은 신형 잠수함과 헬기 탑재 호위함의 추가 확보와 신형 초계기의 전력화를 통해 신속한 전개 및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50]

일본 해상자위대는 숫적으로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밀린다. 그러나 질적인 면에서는 두나라보다 앞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함정의 수와 질적상태는 부록#4 '주요 함정의 취역 수 및 성능제원', 부록#5 '주요 항공기 보유 수 및 성능제원', 부록#6 '유도탄 성능제원'을 참고하면 알 수 있다.

<표 5> 해상자위대의 전력변화(1995년 ~ 2011년)

구 분	전(全)방위대강 (1995년 이후)	2004년 군사력	신(新)방위대강 (2004년 이후)	방위대강 (2011년 이후)
호위함부대 (기동운용)	4개 호위대군	4개 호위대군	4개 호위대군 (8개대)	4개 호위대군 (8개대)
호위함부대 (지방대)	7개대	6개대	5개대	4개대
잠수함부대	6개대	6개대	4개대	6개대
소해함부대	1개 소해대	1개 소해대	1개 소해대	1개 소해대군
육상대잠 항공기부대	13개대	13개대	9개대	9개대
호위함	약 50척	53척	47척	48척
잠수함	16척	16척	16척	22척
항공기	약 170기	212기	150기	약 150기

출처 : 세종연구소. (2004). 「2005년 이후의 일본 방위정책」 , p.18.
국방정보본부. (2013). "2011년 이후의 방위계획 대강", 「일본방위백서」 , p.494.

다) 항공자위대 : 원거리 작전 및 전력 전개능력 확보

항공자위대는 12개 비행대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전투기 수는 348대이며 주 기종은 F-15이다. 2011 ~ 2015년 「 중기방위력 정비계획」 기간 중 노후

50) 대한민국 국방부, 전게서, p.17.

HANSUNG UNIVERSITY

한 F-4의 후속기로 미국의 F-35 도입을 추진 중이며, F-15와 F-2 전투기의 성능개량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노후한 수송기(C-1)를 대체할 차기 수송기(XC-2)를 개발 중이다. 또한 2012년 3월 항공총대사령부를 주일 미 공군이 위치한 요코다기지로 이전하여 미·일 공동 미사일 방어능력을 증대시켰다. 탄도미사일 방어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레이더성능 개량, 오키나와에 PAC-3 추가 배치,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BMDSystem) 탑재 이지스함의 추가 보유 등 전력증강을 추진하고 있다.[51]

일본 항공자위대는 또한 숫적으로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밀린다. 그러나 질적인 면에서는 두나라에 뒤지지 않는다. 일본의 항공자위대 전투기 질적상태는 부록#5 '주요 항공기 보유 수 및 성능제원', 부록#6 '유도탄 성능제원'을 참고하면 알 수 있다.

<표 6> 항공자위대의 전력변화(1995년 ~ 2011년)

구 분	전(全)방위대강 (1995년 이후)	2004년 군사력	신(新)방위대강 (2004년 이후)	방위대강 (2011년 이후)
항공경계 관제부대	8개 경계군 20개 경계대 1개 비행대	8개 경계군 20개 경계대 1개 비행대	8개 비행대 20개 경계대 1개 경계항공대 (2개 비행대)	4개 경계군 24개 경계대 1개 경계항공대 (2개 비행대)
요격 전투기부대	9개 비행대	12개 비행대	12개 비행대	
지원 전투기부대	3개 비행대			
항공 수송부대	3개 비행대	3개 비행대	3개 비행대	3개 비행대
항공 정찰부대	1개 비행대	1개 비행대	1개 비행대	1개 비행대

51) 대한민국 국방부, 전게서, p.17.

HANSUNG UNIVERSITY

구 분	전(全)방위대강 (1995년 이후)	2004년 군사력	신(新)방위대강 (2004년 이후)	방위대강 (2011년 이후)
공중급유 수송부대	–	–	1개 비행대	1개 비행대
지대공 미사일부대	6개 고사군	6개 고사군	6개 고사군	6개 방공포병군
항공기 총 대수	약 400대	약 390대	350대	약 340대
항공기 중 전투기	약 300대	367대	200대	약 260대

출처 : 세종연구소. (2004). 「2005년 이후의 일본 방위정책」 , p.19.
국방정보본부. (2013). “2011년 이후의 방위계획 대강”, 「일본방위백서」 , p.495.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의 경우, 수상 함정과 총톤수에서 세계 3위권, 함대 방공능력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권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방대 안보대학원 박영준 교수는 “중국 해군은 함정 수에서 일본 해군을 앞서지만 소형 프리깃함 위주로 방공능력은 일본보다 떨어지며, 러시아 해군은 항모를 갖고 있고 총톤수에서 일본에 앞서지만 방공 능력이 떨어지고 수상함정의 양적인 규모도 일본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주요 국가 공군이 보유한 첨단 전투기의 성능과 대수, 조종사의 능력, 조기경보통제능력 등을 지표로 각국의 공군력을 비교한 제니퍼 린드에 따르면 일본 항공자위대는 2000년대 초반 현세대 전투기로 F15를 주력기로 180기 정도 보유하고 있고, 조종사는 연간비행시간 150시간 정도의 훈련을 지속, 항공자위대 보유 조기경보통제시스템도 우수해 일본 공군력은 미국, 영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4) 미국・대만・인도 등 주변국과의 군사공조체제 강화

일본에게 있어서 호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이며, 같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안보분야에서도 전략적 이익 및 관심을 공유하고 있

다. 日-호주 양국간 군사협력·교류는 2007년 3월, 日-호주 양국 총리간에 미국이외 최초의 안보분야 공동선언인 '안보협력에 관한 日-호주 공동선언'을 발표한 이후 착실히 진전되고 있으며, 현재 보다 실질적·구체적 협력 단계로 이행하고 있다. 2010년 5월 제 3회 日-호 외무·국방 각료회의(2+2)에서 물품, 서비스 상호제공협정(Acquisition and Cross-Servicing Agreement, ACSA)[52] 및 ACSA에 따른 절차 협정에 대한 서명이 이루어졌으며, 2013년 1월에 발효했다.[53]

최근 주요 군사협력으로 2012년 8월에는 호주 해군이 주최한 다국간 해상 공동훈련 '카카두 12'에 해상자위대의 함정 및 항공기가 참가했다. 2013년 2월에 실시된 美-日-豪 공동훈련 '코스 노스 쾀'에서는 항공자위대가 미 공군 및 호주 공군과의 인도지원·재난구조훈련(HA/DR)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2013년 5월에는 호주 육군이 개최한 사격 경기대회에 육상자위대가 작년에 이어서 참가했다.[54]

韓-日 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불가결한 존재인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시작으로 韓-美-日 3국 간 협력도 진전되고 있다. 2013년 1월에는 韓-美-日 국방실무자 협의를 실시하고, 북한을 포함한 지역정세, 인도지원·재난구조,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 등, 韓-美-日 3국을 둘러싼 안전보장 관련 문제에 대해서 의견교환을 실시하고, 韓-美-日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확인했다. 2013년 6월에는 샹그릴라 회의를 활용하여 韓-美-日 국방장관회담을 실시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회담에서는 북한을 포함한 지역정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북한에 대해 모든 핵 개발계획을 포기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함과 동시에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행위에 대해서 3국이 계속해서 긴밀히 연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2012년 6월에 한반도 남부해역에서, 2012년 8월에 하와이 주변해역에서, 2013년 5월에는 규슈서쪽해역에서 韓-美-日 공동해상훈련을 실시하고, 3국의 연계·협력의 강화를 도모했다.[55]

---

52) 정식명칭 : 일본 자위대와 호주 국방군 간 물품 또는 서비스 상호제공에 관한 일본정부와 호주정부 간 협정
53) 국방정보본부. (2013), 전게서, P.350.
54) 상게서, P.351.
55) 상게서, P.355.

HANSUNG UNIVERSITY

인도는 일본과 중동,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교통로(sea lane)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무역을 해상수송에 의존하는 일본에게 있어 지정학적으로 극히 중요한 국가이다. 2008년 10월에는 日-印 정상이 '日-印간 안보협력에 관한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2009년 12월에는 日-印 정상이 日-印간 안보협력 촉진을 위한 '행동계획'을 책정했다. 2013년 5월에는 인도 싱 총리가 訪日하여 日-印 정상이 '日-印간 안보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에 입각하여 양국의 군사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사실을 환영하는 동시에, 해상자위대와 인도 해군 간 훈련의 정기적이고 빈번한 실시와 US-2에 관한 양국협력에 대한 워킹그룹 설치를 결정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2011년 11월에 실시된 日-印 국방장관회담 합의에 입각하여, 2012년 6월에 해상자위대와 인도 해군의 첫 공동훈련이 일본 사가미만에서 실시되었다.[56]

일본은 자국의 안전과 번영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다국간 및 양국간 대화와 군사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방위성, 자위대는 각국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군사협력과 교류,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제 4 절.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동북아 지역의 냉전상황과 남북한 군사적 대치 상황 하에서는 일본의 군사력이 간접적으로 한국의 도움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는 한·미간의 군사 동맹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미·일 간에도 군사동맹관계가 성립되어 있어 극동유사시에 양국이 공동 대처한다는 양국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세계 3위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적으로 강해지고 동북아지역에서 비중이 큰 군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면,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지 동북아 국제질서의 역학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다. 즉 미국과 더불어 일본이 이 지역에서 평화와 안전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하는 순기능적인 측면과 반대로 주변국의 불안을 조성하는 역기능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해 보았을 때, 분명한 사실은 일본의 정치, 경제, 군사적 영향력이 더욱 증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56) 국방정보본부. (2013), 전게서, P.357.

HANSUNG UNIVERSITY

일본은 소극적인 전수방위(專守防衛)에서 탈피하여 전진방위전략에 의한 군사대국화와 자국의 이익과 관계되는 군사정책을 지향하면서 걸프전 이후의 새로운 세계의 조정자로서 급부상하는 일본의 새로운 역할을 고려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긍정적 측면

일본의 군사력증강이 한반도에 미칠 긍정적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본이 한국의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과 역할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일본의 안보지원 여부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바탕위에서 미·일 안보조약과 한·일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에 근거를 두고 전망할 수 있다. 한·일 기본조약은 비군사적이기는 하지만 안보적 의미를 지닌 점이 특징이다.[57] 한·일 기본조약은 전문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있어 양국이 긴밀히 협조함이 중요하다고 명시함으로서 비군사적 노력에 의한 안보협력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일본이 한국 문제에 무관심할 수 없는 것은 미·일 안보조약상의 규정 때문이다. 동 조약 제4조는 일본 또는 극동에 있어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 발생한 경우 체결국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일본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일본을 비롯하여 전 동북아의 안정에 중요하다'라고 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일본 국익에 합치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안보지원 여건을 배경으로 긍정적인 영향요소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이 미·일 안보체제의 기본 틀 속에서 방위력을 증가하는 것은 동북아 군사력 균형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의 군사 대국화 및 이로 인한 한반도 영향력 증대에 대한 견제기능과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에 대한 강력한 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러시아 변혁에 기인하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군사적 돌발사태에 대한 견제 기능수행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한반도 유사시 미·일 안보조약에 의거 미군에 대한 방위작전지원을 위한 지원기지 및 한국에 대한 후방 병참지원기지로써의 일본의 역할이 향상

57) 민병천. (1986). 「한국방위론」, 고려원, p.84.

HANSUNG UNIVERSITY

되어 효율적인 작전을 전개할 수 있으며 일본의 군사력은 한·미·일의 3각 체제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일본 군사력증강은 한반도를 위한 다차원 국제질서를 형성하여 지역 안보 협력관계의 증진을 도모하고 한국의 안전보장을 유지하는데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일본과의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되고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지역 안보를 위한 안보 협력관계로 증대하게 되면 유사시 근접증원세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중국, 러시아와 정치적 조정역할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일본이 특히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해상교통로 안전보호를 위한 대공, 대잠 능력이 보다 강화되고 서 태평양 해역 방위 역할이 더 강화된다면 한국의 해상 수로의 안전 유지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58] 일본은 현재 미국 측의 요구뿐만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1,000해리의 방위가 가능한 해상 자위력의 육성을 꾀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수출하는 물품 원자재의 대부분을 해상을 통해서 수입하기 때문에 해상교통로의 안전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산업 구조가 일본의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고려하면 해상 수로의 안전보호라는 효과는 매우 중요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일 협력관계가 일본의 군사력증강에 따른 방위산업 발전과 병행된다면 현재 일본이 계획하고 실시단계에 있는 자동경계 관제조직(BADGE 시스템)[59], 전역미사일 방위체제(TMD) 등 고도의 최첨단 군사 과학 기술, 자재를 도입하고 한국의 방위산업과 군사력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본의 고도화된 해·공 감시 및 정보체제와의 협력도 북한 및 동북아 지역에 대한 군사정보 교환을 확대함으로써 조기경보체제를 효율화시킬 수 있다.[60]

이상 일본의 군사력증강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긍정적 측면에 대해 살펴보

58) 전종대. (1997). "일본의 신방위대강에 따른 군사대국화 역할", 국방대학원, pp.64 ~ 65.

59) 'BADGE'시스템이란 Base Air Defense Ground Environment 의 약어로 기존의 수동적인 방공시스템과는 달리 컴퓨터 등에 의한 자동시스템으로 변환된 자동방공경계 관제시스템을 말한다. 이에 따라 ①요격시간의 단축(기존의 1/10),②동시에 다수의 목표 요격을 컨트롤 가능, ③미사일, 전투기 등 각종의 요격기능, ④병기를 효과적으로 사용 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항공자위대는 이 밧지시스템을 1969년 3월부터 운용 개시하였다.

60) 표효식. (1996). "일본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p.71.

HANSUNG UNIVERSITY

았다. 현재 일본이 지니고 있는 현대화된 군사력은 한국안보에 있어 긍정적 측면을 분명 지니고 있다. 그러나 과거 역사부정 및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이를 활용, 한·일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체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느냐에 달려있는 바 여기에 대한 신중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어 진다.

2) 부정적 측면

일본은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인구밀도가 높은 국가이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국가의 기본정책은 자원이 풍부한 지역을 침략하거나 교역에 의해서 자원을 충당하는 방향으로 지향된다. 오늘날 일본은 후자의 경우를 택할 수 밖에 없으며, 교역입국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일본은 자원수송을 안전하게 하는 보호장치를 중요시하게 마련이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해·공군의 증강이 필연적이다. 일본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국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로서 군비를 확보하고 증강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

일본이 군사력을 증강할 경우 한국의 안보에 역기능을 초래할 것이고, 미·일 신방위협력지침 제정과 전역미사일 공동개발 등 일본의 군사력증강에 대해 민감한 경계심을 나타내는 중국 및 러시아의 반응 역시 한국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본의 군사력과 지역내 급속한 역할 증대는 한국안보에 여러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여 한국안보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따른 한국의 군비증강은 막대한 방위비 지출을 초래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일본이 군사력을 증강하여 한반도 주변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상태가 지속될 경우, 중국, 러시아 등이 군사력 증강을 추구할 것이며, 이에 한반도는 북·서쪽에서 러시아, 중국의 현대화된 해군력과 직면하게 되고, 남·동쪽에서 일본의 강력한 해군에 의해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전 해역에서 대륙붕 문제, 어획권 문제, 해상교통로 확보문제 등으로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간 분쟁을 야기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 한국의 경제, 안보 이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

HANSUNG UNIVERSITY

칠 것이다. 특히 중국의 증강된 해·공군력은 해상교통로상의 잠재적인 위협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처럼 일본의 군사력증강은 주변국의 군비증강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한반도의 독자적인 안보역량강화를 불가피하게 할 것이다. 현재도 남북한은 전체예산의 상당부분을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어서 경제 발전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으며, 남북한간 군비경쟁을 심화시켜 북한경제의 회생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남북한간의 군비통제 등 신뢰구축의 노력에도 저해요인이 될 것이다.

둘째, 일본의 군사력증강은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 확대경쟁을 야기하여 결국 북한에서는 중국의 우월권을, 한국에서는 일본의 우월권을 상호 인정하는 형태로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하고 북핵폐기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를 통해 한반도를 중국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완충지대로 일본의 안보전략에 이용하면서, 통일된 한국이 일본에 적대적인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할 것을 우려하여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한반도가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취해야 할 최우선적인 생존전략은 흩어진 민족역량을 결집하여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통일한국의 국력은 인구 7,000만 명에 GNP와 무역규모가 세계 수준에 이르는 중위권 이상의 국력을 지닌 국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한반도는 이러한 통일을 달성함으로써 민족의 생존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제적인 지위와 역할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미국이 경제대국이면서 군사대국인 일본의 역할을 더욱 중시하게 되어 일본에게 동북아 방위의 일부를 대행시키고 대 동북아 군사력 배치를 더욱 저하시키거나 철수하게 되면, 북한에 대한 전쟁 억제역할이 크게 감소되고 유사시 미군의 신속한 대처가 곤란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증원을 기대하기 어렵게 하거나 그 역량이 감소될 수도 있다.

일본방위연구소가 작성한 장기안보 예측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한반도 통일시 주한미군은 크게 감축될 것이며, 이러한 주한미군 철수로 생길 힘의 공백이 우려된다."고 예측하고 중국의 패권추구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은 미군의 계속 주둔이 필요하다고 보고있다.[61] 일본의 군사력증강에 따른

61) 산케이 신문. (1997). 1월 6일자.

HANSUNG UNIVERSITY

주한 미군의 감소는 미군의 대일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 될 수 있을 것이며,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역할 분담정책에 편승하여 일본의 한국에 대한 군사적 관심은 보다 적극화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증강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에서의 일본의 군사적 역할과 대한반도 군사정책을 점진적으로 구체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역할 증대에 따른 독자적인 전략구상을 발전시킬 것이다.

넷째, 일본은 증강된 군사력을 배경으로 독도의 영유권, 동해 및 남해의 수자원 확보, 대한해협의 관리 등 한·일간의 현안문제에 대해 영향력을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을 직접적으로 침략하지 않더라도 정치, 외교적 간섭이나 강압을 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62] 일본이 보통국가처럼 군대를 보유하고,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게 되면 군사력증강은 지금보다 훨씬 증가될 것이며, 한국과 군사력수준 차이가 발생 할수록, 역내에서 일본의 입지가 클수록 한·일간의 현안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한국입장은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일본의 정보망 확장에 따른 한반도영역의 기술적 침범과 군사적 종속관계로 발전, 한국에 대해 고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할 수 있다.[63]

이상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는 한국 안보에 중대한 위협요소로 작용함으로 여기에 대비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어진다.

62) 이웅희. (1995)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p.91.
63) 한영구 외. (1995). "일본연구", 서울 : 국방군사연구소, pp.146 ~ 147.

HANSUNG UNIVERSITY

제 4 장. 한국의 대응방안

역사적으로 경제대국은 예외 없이 군사대국의 힘을 과시했었다. 그러므로 경제대국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 속에 이미 예정된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되 우리는 이를 너무 과대평가 하거나 과소평가함이 없이 초연하게 대처하여야 하겠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긍정적 요인보다는 부정적 요인이 보다 심각하게 작용하므로 부정적인 면에서 더 치중하여 대처하는 한편 긍정적 요소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한국의 안보전략수립 시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해야 한다.

첫째, 한반도 과거 역사로 볼 때 역사적 요인 및 국제정서 문제이다. 역사적으로 일본은 자국의 안전확보와 번영을 위해 한반도를 대륙진출의 교두보로 간주해 왔고, 이는 16세기말과 19세기말에 각각 명백한 침략기도로 발전했다. 이것은 오늘날에 있어서 한국인의 정서와 대일 감정이 적대적 감정으로 일본을 인식하고 있어,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대책이 감정적 이상주의에 빠지게 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일본의 지정학적인 요인을 들 수 있다. 일본은 구조적인 무역국가로서 자원의 확보 및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인 바, 일본은 자원의 안정된 확보를 위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의 확대와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일본은 전통적으로 한반도를 자국의 이익선으로 간주하여 왔다. 따라서 일본은 한반도 통일 후에도 한국을 자국의 영향권에 두려고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의 사이에 끼어 과거 역사상 지역패권확보를 위한 각축장이 되어온 한국으로서는 민족적 자주성과 국가적 존립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 국가와의 세력균형과 외부세력의 지원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경제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한국은 제 3공화국 이후 수출증대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일본과 비슷한 형태의 무역국가가 되었고, IMF체제 후 현재 기업 및 금융기관 등 사회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산업경쟁력

HANSUNG UNIVERSITY

강화를 통한 제 2의 경제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재원의 확보와 고도의 기술도입 등 일본과의 경제협력 관계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한 1997년 이후 아시아를 강타한 외환위기 상황 시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한 일련의 가혹한 경제적 해결책으로써 일본의 아시아 통화기금 주장에 힘을 실어 주었던 것을 고려해 볼 때, 일본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신 대동아 공영권 주장의 발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군사안보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탈냉전후 미국의 지역내 역할 축소에 의해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역할과 능력을 축소시킬 계획으로 있으며, 그 결과 한반도에서 주도적인 방위를 한국에 넘겨주고 일본 및 주변 해역의 통제권을 일본과 공유하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한국과 일본사이에는 독도 영유권 문제, 동해 및 남해의 해양자원 확보, 과거역사 문제 등 한·일간의 현안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반도 내에는 2000년 이후에 1·2차 남·북 정상회담, 이산가족 재회, 경의선, 경원선 철도 복원사업, 남·북한 경제협력사업 등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이 다방면에 걸쳐 광범위하게 모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9·11 테러사태 이후 미국 부시대통령의 “악의 축” 대상국, 즉 불량국가 명단에 여전이 북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우려도 간과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일 안보전략 수립 시 고려할 사항은 일본과의 현안문제가 발전하여 분쟁으로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한 대비태세의 발전과 한반도 통일시까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주변국의 안정과 궁극적인 한반도 통일을 이루기 위해 일본과의 지속적이고 우호적인 협력관계의 유지 등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대응방안이 요구되어진다.

제 1 절. 단기적 대응방안

1) 기준에 입각한 대응

최근 국내일각에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행사에 대해 한국을 제외한 미국과 영국, 그리고 호주는 물론 일본의 식민지였던 아시아 국가들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한국의 외교적

HANSUNG UNIVERSITY

고립화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64] 한국입장에서는 일본이 과거사를 부정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현 시점에서 집단적 자위권행사는 매우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마냥 반대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일정한 기준을 갖고, 이 기준을 넘을 경우에 적극 대응하는 방식을 견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한반도 유사시 한국정부 동의 없이 집단자위권 행사, 독도영유권 주장 등 일정한 기준을 두고 일본의 움직임을 평가하면서 기준을 넘어설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2) 국방비 적정수준 확보

군의 존재 목적은 유사시 전투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불의의 외침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평상시 군을 최첨단 장비 구축과 내실있는 훈련을 통해서 각종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국방예산은 최소한 국내총생산의 3%수준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증론이다. 왜냐하면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그 정도는 할애할 수 있어야 하며 최소한 그 수준은 되어야 건실한 국방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65]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변 군사강국들과 북한의 존재로 인해 3%이상은 되어야 하지만 IMF를 기점으로 급락해서 현재는 2.5~2.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국방비가 감소추세에 있지만 국내총생산의 4%가량을 유지하고, 적으로 둘러싸인 이스라엘은 13%수준이며, 북한은 25%가량을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09년이후 매년 10%이상의 많은 금액을 국방비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국가별 국방비는 부록#3 '각국 국방비 추이'를 보면 알수 있다. 일본은 평화헌법으로 국내총생산의 1%밖에 사용하지 못하지만, 일본의 군사력은 숫적으론 열세하지만 질적으로는 세계 최고수준에 있다. 아베총리가 집단자위권행사를 표명하였고,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이를 지지, 환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북아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대립과 힘겨루기는 더욱 심해지

64) 유웅조. (2014)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둘러싼 쟁점과 한국의 대응과제", 「이슈와 논점」 제769호, p.4.
65) 이병숙, 상게논문, p.51.

HANSUNG UNIVERSITY

고, 군비경쟁은 매우 빠르게 가속화 될 것이다. 따라서 주변 강대국 군사력 건설에 뒤지지 않고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국방비 적정수준을 확보하여 최첨단 군사력 건설에 투자해야 할 것이다.

3) 한·일 군사협력 및 교류 확대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관계를 증진시켜 나가는 것은 한반도 문제해결에 대한 국제적 이해증진에 매우 긴요한 것이며, 이는 나아가 지역안정 및 동북아 지역평화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한·일 양국은 1966년 주일 한국 무관부 개설과 1967년 주한 일본 무관부 개설이래 군사협력 관계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왔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적극적인 군사교류를 추진하여 1994년 이래 매년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해 오고 있다. 또한 군 지도부 인사의 상호방문과 양국 군사학생의 위·수탁 교육 및 군 교육기관과의 상호교류, 한국 해사생도 순항훈련함정/해상 자위대 연습함정의 상호방문 등으로 확대되어 갔다.[66] 또한 양국은 군용기 우발사고 방지를 위해 우리 공군과 일본 항공자위대간 직통선을 운용하고 있으며, 양국 군간 정보교류 회의와 방공실무회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1994년부터 우리 국방부와 일본 방위청의 국장급 대표가 참가하는 국방정책 실무회의를 연례적으로 개최하여 제반 군사분야 현안을 협의하고 있다. 일본은 1997년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새로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한·일 양국간 협의채널을 통하여 우리측에게 동 지침의 개정 방향 및 내용을 설명해 주는 노력을 보였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지침 개정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함과 동시에 한반도와 관련된 사안은 반드시 우리와 협의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이처럼 한·일 군사교류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관계는 첫째, 기존의 한·미·일 삼각협조체제의 주축인 미국이 중심이 되어 종용하고 있으며, 둘째, 해상교통로의 안전 확보라는 공동이익의 보호, 셋째, 경비절감을 위한 양국간의 정보교환가능(방공식별권 또는 주변강국에 대한 정보교환), 넷째, 미국의 영향력 감퇴 시 주변 3강 중 신뢰구축이 가장 가능한 국가는 일본이라는 점 등에서 큰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동북아

66) 합동참모대학. (2002). "전략환경평가 : 일본", 서울 : 국방대학교, pp.141~143.

HANSUNG UNIVERSITY

지역 및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는 한·일 군사협력 및 교류를 통한 신뢰조성이 중요한 바, 군사 당국자간 고위인사의 교류나 군사 정보교류, 간부학생 상호방문, 방위관계 교육 및 친선방문 등을 통한 지속적인 관계증진이 요구되어진다. 이러한 군사적 교류나 안보협력은 위에서 제시한 일본의 집단 자위권행사와 독도영유권 주장, 과거 역사부정 등 기준에 입각해서 도를 넘어서지 않을 경우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 2 절. 중·장기적 대응방안

1) 자주적인 안보역량의 확보

범세계적인 냉전 종식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지역에서는 중국의 핵무기 기술개발, 북한의 핵무기 개발시도 및 장사정 탄도미사일 개발, 유사시 동북아지역에서 역할확대를 위한 일본의 군사력 증강 등 첨단화된 군비증강 현상이 야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에서 현재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정학적 위치, 주변안보여건변화 등을 고려해서 북한의 위협과 통일 후 주변국에 의한 불특정 위협에 대비하여야 하는 군사력건설의 삼중적인 과제를 동시에 부여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북한의 위협과 미래 불특정 위협에 동시 대비하는 부대구조 및 무기 체계로 군사력을 건설해 나가야 할 것이며, 제한된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 전력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작지만 질적으로 강한 기술집약적인 선진군대를 지향하여야 할 것이며 자주적인 안보역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주적인 안보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 보면, 첫째, 군사 안보적 차원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국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가와 사회조직을 생산성 높은 조직으로 변모시켜 주변 강대국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국력의 열세를 극복하고 그 영향력을 배제하여야 한다.

둘째, 북한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의 주변 패권을 추구하는 국가가 자국의 대외팽창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반도를 전장화하여 자국의 영향권하에 포함시키려는 망상을 사전에 분쇄할 수 있도록 평시부터 민·관·군 통합 국가 총력전수행체제를 확립하여 놓아야 한다.

HANSUNG UNIVERSITY

셋째, 불특정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여 방위 충분성의 원리에 입각한 자위에 필요한 거부적 억제전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무기체계는 장사거리 정밀 유도무기, 군사첩보위성 및 조기 경보기, 고성능 잠수함 확보 등 주로 전략무기에 중점을 두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군사력 건설방향은 현재까지 현존 위협세력인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여 지상군위주의 전력발전 개념에서 탈피하여 미래 불특정 위협에 대비한 해·공군을 중시한 전력증강이 요구되어진다.

2) 미국과의 안보협력체제 강화

한·미 군사관계는 제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국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목적으로 38선 이남 지역에 진주하면서 시작되어 1953년 10월에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면서 공식적인 군사동맹 관계가 출범하게 되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의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쌍무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서 이 조약에 의거하여 한국은 주한미군과의 연합 방위체제를 갖추어 북한에 대한 전쟁 억제력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었다.

이처럼 지난 50년 간 한·미 관계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전을 위한 중대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대관계는 지속될 것이다. 미군의 아시아, 특히 한반도의 주둔이 계속되는 현 단계에서는 큰 문제점이 없으나, 미국이 감축 내지 철수를 계획하고, 이를 일본 군사력이 대신하려 한다면, 문제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미국이 일본의 역할을 과신하여 일본에게 동북아 방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시키고 미 군사력을 인도양 등 타 지역에 이동 배치하면 이 지역의 안보상 사전 억제역할이 크게 감소되고, 유사시 미군의 즉각 대응이 곤란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증원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거나 또는 그 역량이 감소될 수도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일본이 증강된 군사력을 배경으로 독도의 영유권, 동해 및 남해의 수자원 확보, 대한해협의 관리 등 한·일간의 현안문제에 대해 영향력을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을 직접적으로 침략하지 않더라도 정치, 외교적 간섭이나 강압을 가할 가

HANSUNG UNIVERSITY

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과 러시아 역시 과거 동북아 지역의 암울한 역사를 고려할 때,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협력관계에서 한·미 우호 친선협력관계를 국가이익 차원과 군사자주권 확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성숙 발전시켜야 하며 이러한 한·미 안보관계가 재조정되는 과정에서 점차 주한미군 감축 및 역할 조정, 북한 핵 및 미사일개발 문제, 전시작전통제권의 이양, 방위비 분담문제 등 양국 간의 주요 안보현안을 협의 조정하면서 더욱 더 미국과의 안보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구축

상호간 신뢰조성을 위한 양국간의 안전보장 대화 및 군사교류는 당사국 안보를 위한 기본정책으로 활용되고 있고 특히 다자간 안보협력체제가 마련되지 못한 동북아 지역의 경우 각국간의 교차적 대화 및 교류는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냉전시대의 주요 경쟁국이었던 미국과 러시아간의 활발한 대화 즉, 1998년 두 차례의 정상회담 개최, 국방부간 핫라인의 설치, 운영 등 양국 간의 상호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군사교류도 탈냉전 이후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1996년, 1997년에 양국의 군 지도부 인사들이 상호 방문하였고, '해상 우발사고 방지협정'을 체결하는 등 양국은 군사적 측면에서도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1998년 6월에는 클린턴 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한반도 긴장완화에 대한 공동 노력 등 많은 분야에서 미·중간 의미있는 합의들을 이끌어 내었다. 미국은 국가안보 강화, 세계 경제번영 지원 및 해외 민주주의 신장을 위해 군사력과 외교력을 바탕으로 한 '개입 및 국제지도력 유지(Engagement & Leadership Abroad)'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북아 지역에서는 미국에 위협을 가 할 수 있는 지역패권주의를 방지하고, 지역분쟁을 예방 해결하기 위해 기존 쌍무동맹관계를 기반으로 한 다자간 안보협력을 모색하고 있다.[67)]

67) 국방부. (2000). 「2000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p.24.

HANSUNG UNIVERSITY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반도 주변의 국제환경을 살펴보면 탈냉전시대를 맞아 '21세기 세계질서'라고 불릴 수 있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아직까지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사이에 탈냉전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관계가 아직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러한 세계 4대 강국의 이익이 교차하고 있는 동북아에서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는 일본의 군사력증강 완화 및 역내분쟁 예방과 한반도의 평화적통일 여건조성의 대처방안이 될 수 있다. 이것은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남·북 공동선언, 그 이후 남북관계의 발전, 10월 제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 Asia Europ Meeting) 의 서울 개최 시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세계 정상(26개국)들의 지지성명 등 한반도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제반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동북아 국가들(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북한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안보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역내 전반적인 안보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물론 최근 아시아·태평양 광역 수준에서 '아세안지역포럼(ARF : ASEAN Reginal Forum)'이 결성되어 동북아의 모든 국가가 참여하고 있지만(2000년 7월 북한 가입) 역내국가 등의 상호불신으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rdination in Europe)와 같은 형태의 구체적인 다자간 안보협력체제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구상에 대한 중국의 의구심과 BMD, TMD 등과 같은 현안문제에 대한 주요국간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어 다자간 안보기구 구상은 아직 많은 난관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역내에서 영향력 행사가 다소 부족하지만 반대로 강대국간 대립과 견제속에서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형성을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본다. 한국이 제시할 수 있는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구상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동북아 지역에서의 다자간 안보체제 형성을 위한 전제조건은 미국의 지원이 필수적인 바 안보체제의 골간은 기존의 미국중심의 양자간 동맹 체제(미·일, 한·미 동맹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거기에서 약간 변형, 발전된 형태(미국 중심의 양자 동맹끼리의 연합 또는 연계 등을 취하는 형태의 유사 다자간 안보체제)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다자간

HANSUNG UNIVERSITY

안보체제의 구축은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체제의 우산속에서 한·일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다자간 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자가 되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인권 및 영토문제 등 국가간의 민감한 반응에 대한 문제는 제외시키고 주권존중 및 내정 불간섭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 역내국가들이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사항들을 주요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역내국가들의 군사력에 대한 투명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국방백서의 상호교환과 합동군사훈련 실시 및 국방관계자 정기회의 등을 모색해야 한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지역 패권국가의 출현을 억제하고 지역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국가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국은 다자간 안보기구의 형성 논의에 주도권(Initiative)을 쥐고 적극적 외교를 펴나가야 할 것이다.

4) 미래지향적인 한·일 협력관계 추진

장기적인 차원 즉, 한반도 통일 후 한국과 일본이 동북아 지역에서 공동의 국가이익을 위해 지역안보의 동반자로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양국이 공동으로 추구할 수 있는 안보이익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은 첫째, 지역내에 주한미군 및 주일미군 주둔을 유지시켜 지역내 안전보장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현재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냉전 시대에 공산주의 세력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전진기지로써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탈냉전 후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제를 위해 주둔하고 있고 일본에 있는 미군은 지역안보를 위해서 주둔하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전략은 동북아지역에서 중국의 위협을 억제함으로써 이 지역내에서 패권국가의 등장을 억제하고 동시에 미국의 국가이익으로서 태평양·아시아 지역에서의 해상교통로의 보호에 중점을 두는 두 가지 목적상 미군을 계속적으로 주둔시켜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한국은 안보전략상 미래 불특정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고 일본의 군사대국화 지향을 억제하는 역할과 지역내의 균형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여 한반도와 역내에 미군의 지속적인 주둔

HANSUNG UNIVERSITY

필요성을 역설할 것이다.

반면에 일본은 동북아지역에서 중국의 급부상에 대한 견제와 해상교통로의 보호차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미군 주둔을 이해할 것이다. 위와 같은 한·미·일 공통적, 전략적 이익을 위해 현 주일·주한 미군존속시 부대 재배치 및 전력조정 등은 필수적인 바 미군의 재배치 및 역할수행과 연계한 한·일간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며 미국의 전략적 구도에 최대한 협조하여 지역내 안정을 유지하는데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해상교통로 보호에 대한 한·일간의 협력이 요구되어진다. 즉 일본과 한국은 자유무역국가로서 수출·입 물동량의 대부분을 해상교통로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군사력 증강실태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일본은 1,000해리 해상방호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 해군의 능력은 연안방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단기간내 일본과 대등한 수준의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한 방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경제적인 부담요인이 가중될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단기적으로는 해상교통로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는 일본의 협력을 받아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능력이 해상교통로를 부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시 해상교통로의 확보차원에서 일본과의 책임분담이 요구되어 진다.

셋째, 중국이 지역의 군사적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견제하고, 지역내에서 책임 있는 역할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한·일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되어진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한·일간 경제적·문화적 협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한국과 중국과의 과거 역사적인 관계를 고려해 중국이 한국에 대해 영향을 행사할 가능성이 일본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해 중국이 북한에 대해 미칠 영향이 일본보다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한국과 일본이 과거 어느 시점보다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안보 및 군사적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이라는 변수를 두고 한·일간의 미묘한 불신과 의심이 꺼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한·일 관계의 기본축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동북아지역에서 중국의 패권주의 지향을 억제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상호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중국이 지역내에서 책임과

HANSUNG UNIVERSITY

건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넷째, 동북아지역에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금지를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지난 1998년 8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이 일본 영공을 지나간 것과 2006년 10월 북한의 핵보유 선언은 일본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다 주었으며 동시에 북한의 위협을 최대의 안보위협으로 간주하고 초강경 대북제제 조치를 취하였다.[68] 북한의 핵무장과 지속적인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일본에게도 안보의 직접적인 위협요소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장 저지 및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금지를 위해 현재 진행중에 있는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한·일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어진다.

68) 김영춘. (2003). "일본의 북한위협 인식과 군사력 강화", 통일연구원, p.9.

HANSUNG UNIVERSITY

제 5 장. 결 론

일찍이 손자는 “知彼知己百戰不殆”, “不戰而屈人之兵 善之善之者也” 라고 한 바 있다. 이것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라는 의미를 지닌 말이다. 이 말은 남북으로 분단되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에도 적절히 응용할 수 있는 좋은 말이라고 생각되지만, 흔히 ‘가깝고도 먼 나라’로 일컬어지는 일본에도 적용해보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 말이기도 하다.[69]

일본의 전략가들은 21세기 동아시아 안보에서 최대의 초점은 중국이 될 것이며, 현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15년 후에는 항모를 보유함으로써 일본의 위협이 되고, 50년 후에는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70] 그런데 어느 사이에 세계가 놀랄만한 전력을 보유하게 된 일본 자위대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주변국과의 영토분쟁, 미・일 안보관계를 이용하여 장차 중국 등 주변국의 위협에 대비해서 서서히 탈바꿈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와 군사력 증강실태를 토대로 한국의 대응방안으로 제시하였고, 결과를 요약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탈냉전 이후 세계적인 군사력 감축의 분위기 속에서도 동북아 지역의 경우에는 여전히 안보상 위협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군사강대국들의 강력한 군사력이 밀집되어 있다. 또한 동북아 지역에서 상호 지역패권추구 차원에서 경쟁중에 있는 중국의 심상치 않은 군사적 움직임과 센카쿠 열도 등에 대한 영토문제의 미해결로 유사시 분쟁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한반도에는 여전히 160만 명이 넘는 지상병력이 대치 상태이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은 일본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 지역의 안보상의 특수성은 일본의 군사력을 냉전시대부터

69) 김강녕. (2002). “일본의 방위정책과 군사력 증강”, 「해양전략 제114호」, 해군대학, p.76.
70) 조연호. (2000). “일본의 안보정책구상과 한국안보”, 「국방저널」, 국방부, p.74.

HANSUNG UNIVERSITY

증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으며,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다시 주변국을 자극하는 등 복잡한 양상으로 발전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일본의 안보환경의 변화는 일본 방위정책을 변화시키는 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전후 일본 방위정책의 기초를 형성하였던 제 원칙들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본의 방위정책은 일본 헌법 제9조, 1957년의 국방의 기본방침, 1976년의 방위계획 대강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기본 구조로부터 전수방위의 원칙, 문민통제의 원칙, 비핵 3원칙, 무기수출금지 원칙, 개별적 자위의 원칙 등은 일본의 방위원칙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였으나, 문민통제의 원칙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상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일본의 군사력 수준은 전수방위의 범위를 넘고 있으며, 1992년 PKO 협력 법안의 통과로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거 식민지 지배를 경험하였던 아시아 지역국가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군사력 증강에 관한 제 요인들 중 우선 먼저 일본의 군사력증강을 촉진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국제적인 요인으로는 미국의 동북아지역에서의 전력증강 한계성에 따른 일본에 대한 군사적 역할 확대요구와 일본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중국의 해양중심의 군사력 현대화 추진, 북한의 핵실험 및 장사거리미사일 개발 등은 일본 안보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군사력증강의 촉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적 요인으로는 일본방위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환경 및 국민의 안보의식 변화와 보수우익의 '보통국가' 구현 요구증대, 그리고 경제력을 기반으로 한 세계 최고수준의 방위비 지출, 기술수준 등 일본의 군사적 잠재력은 일본의 군사력을 단시일 내에 세계 최고 수준으로 증강시키는 것을 가능케 하고 있으며, 자원의 높은 해외의존도에 따른 해상교통로의 확보 등의 요인은 일본 군사력 증강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 최대의 정치적 관심사안인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보장을 위한 미국, 중국 등의 관련국가와의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의도와 미국의 세계전략 수행 상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협력증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일본의 독자전력에 의한 군사대국화는 반대하고

HANSUNG UNIVERSITY

있으며 어디까지나 대미 이탈을 불원하는 미국의 전략구도 내에서 보완적 성격의 전력증강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중국 등 주변 국가와의 과거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하에서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견제 및 반발이 계속 되고 있고, 일본 국내적 문제에 의한 제약이 있다.

그러나 일본은 군사력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안보정책 변화를 추구하면서 군사력 증강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였다. 일본의 군사력 확대 추진실태로는 "보통국가", "보통군대" 건설과 동적방위력 운영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즉응성 ·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부대구조 개편과 해 · 공군중심의 첨단전력을 지속 건설중에 있으며, 미국 · 대만 · 인도 등 주변국과의 군사공조체제 강화를 통해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일본의 국제적인 정치력·경제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일본의 군사대국화 경향은 한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영향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의 양방향으로 나타날 것이다.

먼저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동북아 지역내의 군사력 균형유지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한반도 유사시 미군에 대한 지원기지 및 병참지원기지로써의 일본의 역할에 의해 효율적인 작전을 전개할 수 있고, 수·출입의 90% 이상을 해상운송에 의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 해상 교통로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아울러, 일본 군사력증강은 한반도를 위한 다차원 국제질서를 형성하여 지역안보협력관계의 증진을 도모하고, 한·일 협력관계유지를 통해 한국군 군사력증강에 필요한 고도의 최첨단 군사과학 기술과 자재를 도입하여 한국의 방위산업과 군사력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부정적 측면으로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따른 한국의 군비증강은 막대한 방위비 지출을 초래함으로써 경제발전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일본 및 중국의 역내 영향권 확대 다툼으로 인하여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시킬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동북아지역에서 동북아지역방위에 대한 미국의 역할을 일본에게 대행시키고 미군병력을 축소시켰을 때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신속한 억제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이 외에도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한·일간의 현안문

HANSUNG UNIVERSITY

제에 대해 일본의 영향력 확대 가능성을 낳는 등 한반도 안보에 중대한 위협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상과 같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긍정적 요인보다는 부정적 요인이 보다 심각하게 작용함으로 부정적인 면에 더 치중하여 대처하는 한편 긍정적 요소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단기적으로 대처해야 할 대응방안으로서는 첫째로 일본의 군사력증강이 한국안보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기준에 입각한 대응을 하여야 하며, 둘째로 국방비를 적정수준 확보하여 최첨단 군사력 건설을 건설하여야 하며, 세째로 한 · 일 군사협력 및 교류 확대가 요구되어 진다. 중·장기적 대응방안으로는, 첫째로 일본을 포함한 미래 불특정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자주적인 안보역량을 확보하고, 둘째로 미국과의 지속적인 안보협력체제 강화를 통한 전쟁 억제력 및 동북아 평화 구축, 셋째로 동북아 지역에서의 일본의 군사대국화 방지 및 역내 분쟁예방과 한반도의 평화적 여건 조성을 위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자간 안보협력기구 구축, 그리고 넷째로 지역내의 안정을 추구하는 한 · 일간의 공동안보이익을 위하여 미군주둔에 대한 한 · 일간의 군사협력과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지를 위한 협력, 해상수송로 보호에 대한 책임분할, 중국의 지역패권 부상 억제를 위한 한 · 일간의 협력 등 지역안보의 동반자로서의 미래지향적인 한 · 일 협력관계를 추진하여야 한다.

본 연구가 주는 시사점으로 일본은 군사강대국이 되기 위한 모든 것을 갖추었고, 헌법개정만 된다면 수년내에 세계 최고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보통국가로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다면 한국에 대해 어떠한 국가안보전략을 취하겠는가?” 이 답은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다. 국가안보전략은 국제정세와 국가이익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와 국민은 1910년 경술국치로 국탈을 강탈당했던 뼈아픈 과거역사를 잊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또한 한국과 한국인을 위태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안보에 위협이 되는 주변국가들의 안보정책과 군사력 건설방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중·장기적인 대비책을 반드시 세워야 할 것이다.

일본 군사력증강을 연구 하면서 방위백서 등 표면적으로 제시된 군사력 증

HANSUNG UNIVERSITY

강에 대해서만 연구가 가능하였고, 일본의 군사잠재능력인 군사기술, 핵보유 능력 등 관련자료가 부족하여 연구가 제한되었다. 최근 유럽을 순방중인 아베 총리가 프랑스와 무인 잠수기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일본 및 국내 방송에서 보도 되었다. 세계 경제대국인 일본의 군사기술과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심층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 본다.

비록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표면적으로 경제적 지위에 걸맞는 국제적 역할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인접해 있는 한국에 언제든지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현 상황에서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 국내, 외적으로 노력하여 한국안보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안정과 평화에 이바지해야 하며, 한국의 위상 확보와 세계질서의 균형에 의한 세계평화의 유지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HANSUNG UNIVERSITY

참 고 문 헌

1. 단행본

극동문제연구소. (1996).「극동문제」, 1996년 제 1월호

김경민. (2003). 「어디까지 가나 일본 자위대」, 서울: 아침바다

김준한. (2005).「주변국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일본)」, 서울: 국방대학교

문태성. (2006).「우리통일과 주변 4국의 겉과 속」, 건국대학교 출판부

민병천. (1986). 「한국방위론」, 고려원

서영석. (2004).「일본의 유사법제」, 서울: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유철종. (2006).「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영토분쟁」, 삼우사

유응조. (2014),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둘러싼 쟁점과 한국의 대응과제", 「이슈와 논점」,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유웅조. (2014)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둘러싼 쟁점과 한국의 대응과제", 「이슈와 논점」 제 769호

엄수현. (1994).「일본군사」, 서울: 시사일본어사

이원덕. (2002).「전후 일본의 안보정책」, 중심

장문석. (1997).「현대일본 군사론」, 서울: 국방대학교

정광하. (1989).「일본 방위정책의 이상과 현실」, 부산: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전재성 외. (2008).「한국의 동아시아 미래전략」, 서울: 삼영사

하정열. (1999).「일본의 전통과 군사사상」, 서울: 팔복원

한국전략 문제연구소. (2008).「동북아 전략균형 2008」, 서울: 한국전략 문제연구소

한영구 외,「일본연구」, 서울: 국방연구소, 1995.

2. 학위논문 및 학술논문

강한구・박민구. (1998). "일본의 보수우익이 방위정책에 미치는 영향분석",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HANSUNG UNIVERSITY

김년수. (2006). “탈냉전기 일본의 안보전략과 동북아 안보협력체제 전망”, 대전: 충남대 평화안보연구소

김태열. (2008). “일본의 군사력증강과 주변국에 대한 안보적 목표,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학성. (2005). “동북아 질서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충남대 평화안보연구소

김창환. (1998). “일본의 군비증강과 우리의 안보,” 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태현 · 백종천. (1998). “탈 냉전기 우리 대외 정책의 분석과 평가,” 성남: 세종연구소

다케시다 히데시. (1996). “일본 방위정책의 새로운 구상,” 「전략연구」, 서울: 전략문제 연구소

이원덕. (2003). “탈냉전과 일본의 신안보정책”, 「안보연구회 발표논문」

박영준. (2006). “일본의 정세,” 「세계안보정세종합분석(2004-2005)」, 서울: 국방대학교

박영준. (2005). “일본의 신 방위계획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 「군사논단」, 통권 42호, 서울: 우리군사학회

배정호. (2003). “일본의 안보개혁과 유사법제 정비,” 「통일정세분석」

백상현. (2002). “일본의 군사력 증대와 우리의 대응전략,”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병숙. (2010). “일본의 군사력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웅희. (1995)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이진환. (1996).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면우. (2003). “일본의 유사법제 논의”, 「정책보고서 2003-03」, 성남: 세종연구소

유보형. (2000).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정석. (1996). “일본 방위 안보정책의 변화와 향후 전망,” 「일본의 정계 개편과 정책변화」, 성남: 세종연구소

전면엽. (2002).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동북아 지역 안보에 관한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종대. (1997). “일본의 신방위대강에 따른 군사대국화 역할”, 국방대학원

정대주. (1997). “일본의 신 방위 정책이 우리에 미치는 영향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HANSUNG UNIVERSITY

최운도. (2002). “일본 방위정책변화와 한반도의 안보,” 한국국제정치학회 편, 『일본 대내외 정책의 현안과 쟁점』, 서울: 한국국제정치학회
표효식. (1996). “일본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3. 정부기관 등의 공문서

국방정보본부. (1995). “세계의 군사동향”, 서울 : 국방정보본부
국방정보본부. (1996). 「일본의 신방위 정책」, 서울: 국방정보본부
국방정보본부. (1998). 「세계 군사동향 1997-1998」, 서울: 국방정보본부
국방정보본부. (2008). 「2007 일본 방위백서」, 서울: 국방정보본부
(2013). 「2013 일본 방위백서」, 서울: 국방정보본부
국방정보본부. (2004). 「일본의 신방위대강」, 서울: 국방정보본부
국방정보본부. (2007). “일본의 국가안보전략과 군사적 역량확대 추진동향”, 서울: 국방정보본부
국방연구원. (2003). 「국방정책연구 2003 봄호」, 서울: 국방연구원
김강녕. (2002). “일본의 방위정책과 군사력 증강”, 「해양전략 제114호」, 해군대학
대한민국 국방부. (2000). 「2000 국방백서」, 서울: 대한민국 국방부
(2004). 「2004 국방백서」, 서울: 대한민국 국방부
(2006). 「2006 국방백서」, 서울: 대한민국 국방부
(2008). 「2008 국방백서」, 서울: 대한민국 국방부
(2012). 「2012 국방백서」, 서울: 대한민국 국방부
서주석. (1992). “일본군사력의 평가”, 「국방논집」, 제17호, 서울 : 국방부
외교안보연구원. (2002). 「일본 정부의 유사법제 추진현황과 전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외교안보연구원. (2003). 「중장기 국제정세 전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외교안보연구원. (2005). 「2006년 국제정세전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조연호. (2000). “일본의 안보정책구상과 한국안보”, 「국방저널」, 국방부
합동정보본부. (2005). 「일본 방위백서」, 서울: 합동정보본부

HANSUNG UNIVERSITY

합동참모대학. (2002). “전략환경평가 : 일본”, 서울 : 국방대학교

4. 신문, 주간 및 월간지 등의 정기간행물

ㅇ 경향신문 ㅇ 중앙일보 ㅇ 조선일보 ㅇ 우리일보

ㅇ 일본경제신문 ㅇ 한겨레신문 ㅇ 산케이신문

HANSUNG UNIVERSITY

부 록

#1. 주요국·지역 병력 일람(개수·槪數)

육상 병력		해상 병력			항공 병력	
국가명 등	육상병력(만 명)	국가명 등	톤수(만 톤)	척 수	국가명 등	작전기 수
중국	160	미국	636.2	961	미국	3,522
인도	113	러시아	204.0	979	중국	2,579
북한	102	중국	146.9	965	러시아	1,631
미국	60	영국	67.9	222	인도	930
파키스탄	55	인도	45.6	195	한국	620
한국	52	프랑스	41.5	257	이집트	608
베트남	41	인도네시아	65.6	159	북한	603
터키	40	터키	23.1	224	대만	513
미얀마	38	스페인	22.7	124	이스라엘	484
이란	35	대만	21.7	356	프랑스	482
이집트	31	이탈리아	20.9	181	파키스탄	444
인도네시아	30	독일	20.3	116	터키	423
러시아	29	한국	19.3	193	시리아	365
태국	25	브라질	17.6	106	영국	358
이라크 /콜롬비아	24	호주	16.6	79	이란	340
일본	14	일본	45.2	141	일본	410

출처 : 국방정보본부.(2013). "주요국·지역 병력 일람", 「일본방위백서」, p.479.

HANSUNG UNIVERSITY

#2. 주변국의 군사력 현황

병력

단위 : 명

구분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계	1,569,417	956,000	2,285,000	247,746
육군	641,470	270,000	1,600,000	151,641
해군	333,248	154,000	255,000	45,518
공군	344,568	167,000	330,000	47,123
기타	해병대 206,533 해안경비대 43,598	공수 35,000 전략 80,000 지휘/지원 250,000	제2포병 100,000	통막 3,464

육군

구분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사단(개)	10	6(86개 여단)	38	사단 9 여단 6
전차(대) 보병전투차량(대) 정찰차(대) 장갑차(대)	5,855 6,452 1,237 19,226	20,800 15,860 2,200 15,700	7,400 2,350 800 (경전차) 2,700	806 68 102 804
견인포(문) 자주포(문) 다련장포(문) 박격포(문)	1,836 1,594 1,143 2,455	12,765 5,870 4,026 3,500	6,176 1,785 1,770 2,586	422 187 99 1,062
대전차유도무기(기)	SP 2,119	-	SP 276	SP 30 휴대용 1,610
지대공미사일(기)	1,281	1,570	290	700
헬기(대)	4,050	1,278	651	418
항공기(대)	254	-	8	12

SP Self Propelled (자주식)

HANSUNG UNIVERSITY

해군

구분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잠수함(척)		57	53	68	18
전략핵잠수함(척)		14	12	3	–
항공모함(척)		11	1	1	–
순양함(척)		22	6	–	–
구축함(척)		61	18	13	33
호위함(척)		20	8	65	15
초계함·연안전투함정(척)		28	80	211	6
소해함(척)		9	53	88	29
상륙함(척)		29	20	87	5
상륙정(척)		269	19	151	19
지원함(척)		188	249	205	76
전투기(대)		964	116	244	–
헬기(대)		641	210	78	137
해병전력	해병사단(개)	3	여단 3	여단 2	–
	전차(대)	447	160	124(경전차)	–
	정찰차량(대)	252	60	–	–
	상륙돌격장갑차(대)	1,311	150	–	–
	병력수송장갑차(대)	2,225	750	248	–
	야포(문)	2,071	367	40	–
	대전차미사일(기)	2,299	72	–	–
	UAV(대)	100	–	–	–
	항공기(대)	470	–	–	–
	헬기(대)	546	–	–	–

HANSUNG UNIVERSITY

공군

구분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전략폭격기 (대)	155	251	-	-
폭격기 (대)	-	-	82	-
정찰기 (대)	136	148	103	17
지휘기 (대)	4	4	2	-
전투기 (대)	2,072	1,398	1,425	348
수송기 (대)	863	337	320	64
급유기 (대)	476	20	10	4
조기경보기 (대)	46	20	8	17
훈련기 (대)	1,130	201	490	248
헬기 (대)	173	989	104	56
민간예비 (대)	1,413	-	-	-
전자전기 (대)	36	-	13	3

출처 : 대한민국 국방부. (2011). 「2012 국방백서」 , pp.286 ~ 287.

HANSUNG UNIVERSITY

#3. 전차, 주요 화기 등의 보유 수 및 성능제원

2013. 3. 31 기준

종류	무반동포	박격포	야포	로켓탄 발사기 등	방공 기관포	전차	장갑차
보유수(대략)	2,710	1,070	520	600	50	740	970

2013. 3. 31 기준

종류	품목	화기	총 중량(t)	최고속도(km/h)	승무원 혹은 조작인원(명)
전차	10식 전차	120mm 전차포	약 44	70	3
	90식 전차	120mm 전차포	약 50	70	3
장갑차	96식 차륜 장갑차	12.7mm 중기관총 혹은 자동 유탄총	약 15	100	10
	89식 차륜 전투차	35mm 기관포	약 27	70	10
	87식 지휘통신차	12.7mm 중기관총	약 14	100	8
야포	87식 정찰 경계차	25mm 기관포	약 15	100	5
	FH-70 155mm 견인곡사포	155mm 곡사포	약 9.6	15	9
	99식 155mm 자주포	155mm 곡사포	약 40	50	4
	203mm 자주포	203mm 곡사포	약 28	55	5
고사기관포	87식 자주 고사기관포	35mm 고사기관포	약 38	55	3

출처 : 국방정보본부. (2013). "전차, 주요 화기 등의 보유 수 및 성능제원", 「일본방위백서」 , p.511.

HANSUNG UNIVERSITY

#4. 주요 함정의 취역 수 및 성능제원

2013. 3. 31 기준

구분	수(척)	기준 배수량(천 t)
초위함	48	225
잠수함	16	45
기뢰함정	29	27
초계함정	6	1
수송함정	12	29
보조함정	30	126
계	141	452

숫자는 반올림에 따라 기입된 것이므로 합계와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2013. 3. 31 기준

항종별	급	기준 배수량(t)	최대속력 (노트)	주요 장비		
호위함	공고급	7,250	30	127mm포 x1 고성능 20mm 기관포 x2	이지스 장치 1세트 VLS 장치 1세트	SSM장치 1세트 단어뢰 발사관 x2
	아타고급	7,750	30	5인치포 x1 고성능 20mm 기관포 x2	이지스 장치 1세트 VLS 장치 1세트	SSM장치 1세트 단어뢰 발사관 x2
	시라네급	5,200	32 (31)	5인치포 x2 고성능 20mm 기관포 x2	단거리 SAM장치 x1 아스록 장치 x1	단어뢰 발사관 x2 초계 헬기 x3
	휴우가급	13,950	30	고성능 20mm 기관포 x2	VLS 장치 1세트	단어뢰 발사관 x2 초계 헬기 x3
	하타카제급	4,600 (4,650)	30	5인치포 x2 고성능 20mm 기관포 x2	타타르 장치 x1 SSM장치 1세트	아스록 장치 x1 단어뢰 발사관 x2
	아카즈키급	5,050	30	5인치포 x1 고성능 20mm 기관포 x2	VLS 장치 1세트 SSM장치 1세트	어뢰 발사관 x2 초계 헬기 x3
	다카나미급	4,650	30	127mm포 x1 고성능 20mm 기관포 x2	VLS 장치 1세트 SSM장치 1세트	단어뢰 발사관 x2 초계 헬기 x1

HANSUNG UNIVERSITY

항종별	급	기준 배수량(t)	최대속력 (노트)	주요 장비		
호위함	무라사메급	4,550	30	76mm포 x1 고성능 20mm 기관포 x2	VLS 장치 1세트 SSM장치 1세트	단어뢰 발사관 x2 초계 헬기 x1
	아사기리급	3,500 (3,550)	30	76mm포 x1 고성능 20mm 기관포 x2 단거리 SAM장치 1세트	SAM장치 x1 아스록 장치 x1	단어뢰 발사관 x2 초계 헬기 x1
	히츠유키급	2,950 (3,050)	30	76mm포 x1 고성능 20mm 기관포 x2 단거리 SAM장치 1세트	SAM장치 x1 아스록 장치 x1	단어뢰 발사관 x2 초계 헬기 x1
잠수함	아부쿠마급	2,000	27	76mm포 x1 고성능 20mm 기관포 x1	SAM장치 x1 아스록 장치 x1	단어뢰 발사관 x2
	오야시오급	2,750	20	수중발사관 1세트	–	–
소해정	소류급	2,950	20	수중발사관 1세트	–	–
	아베야마급	1,000	14	20mm 기관포 x1	심심도(深深度) 소해용구 1세트	–
	스가시마급	510	14	20mm 기관포 x1	소해장치 1세트	–
	히라시마급	570	14	20mm 기관포 x1	소해장치 1세트	–
	에노시마급	570	14	20mm 기관포 x1	소해장치 1세트	–
마사알정	하야부사급	200	44	76mm포 x1	SSM장치 1세트	–
수송함	오오스미급	8,900	22	고성능 20mm 기관포 x2	수송용 공기부양정x2	–

출처 : 국방정보본부. (2013). “주요 함정의 취역 수 및 성능제원”, 「일본방위백서」 , p.511.

HANSUNG UNIVERSITY

#5. 주요 항공기의 보유 수 및 성능제원

2013. 3. 31 기준

소속	형식	기종	용도	보유수(대)	최대속도(노트)	승무원(명)	전장(m)	전폭(m)	엔진
육상자위대	고정익	LR-1	연락정찰	2	290	2(5)	10	12	터보프롭, 쌍발
		LR-2	연락정찰	7	300	2(8)	14	18	터보프롭, 쌍발
	회전익	AH-1S	대(對)전차	70	120	2	14	3	터보샤프트
		OH-6D	관측	84	140	1(3)	7	2	터보샤프트
		OH-1	관측	38	140	2	12	3	터보샤프트, 쌍발
		UH-1H/J	다용도	141	120	2(11)	12/13	3	터보샤프트
		CH-47J/JA	수송	56	150/140	3(55)	16	4/5	터보샤프트, 쌍발
		UH-60JA	다용도	34	150	2(12)	16	3	터보샤프트, 쌍발
		AH-64D	전투	10	150	2	18	6	터보샤프트, 쌍발
해상자위대	고정익	P-3C	초계	75	400	11	36	30	터보프롭, 4발
		P-1	초계	4	450	11	38	35	터보프롭, 4발
	회전익	SH-60J	초계	46	150	3	15	3	터보샤프트, 쌍발
		SH-60K	초계	39	140	4	16	3	터보샤프트, 쌍발
		MH-53E	소해·수송	6	150	7	22	6	터보샤프트, 3발
		MCH-101	소해·수송	5	150	4	23	19	터보샤프트, 3발
항공자위대	고정익	F-15J/DJ	전투	201	마하 2.5	1/2	19	13	터보팬, 쌍발
		F-4EJ	전투	62	마하 2.2	2	19	12	터보제트, 쌍발
		F-2A/B	전투	92	마하 2	1/2	16	11	터보팬, 단발
		RF-4E/EJ	정찰	13	마하 2.2	2	19	12	터보제트, 쌍발
		C-1	수송	25	440	5(60)	29	31	터보팬, 쌍발
		C-130H	수송	15	340	6(92)	30	40	터보프롭, 4발
		KC-767	공중급유·수송	4	460	4~8(200)	49	48	터보팬, 쌍발
		KC-130H	공중급유기능부가	1	340	6(92)	30	40	터보프롭, 4발
		E-2C	조기경계	13	330	5	18	25	터보팬, 쌍발
		E-767	조기경계관제	4	450	20	49	48	터보팬, 쌍발
	회전익	CH-47J	수송	15	150	3(55)	16	4	터보샤프트, 쌍발

출처 : 국방정보본부. (2013). "주요 항공기 보유 수 및 성능제원", 「일본방위백서」, p.510.

HANSUNG UNIVERSITY

#6. 유도탄 성능제원

2013. 3. 31 기준

용도	명칭	소속	중량(kg)	전장(m)	직경(cm)	유도방식
탄도미사일 요격	페트리어트 (PAC-3)	항공 자위대	약 300	약 5.2	약 26	프로그램+지령+ 레이더·호밍
	SM-3	해상 자위대	약 1,500	약 6.6	약 35	지령+적외선 호밍
對항공기 對미사일	페트리어트 (PAC-2)	항공 자위대	약 1,000	약 5.0	약 41	프리프로그램+지령+ TVM
	개량형 호크	육상 자위대	약 640	약 5.0	약 36	레이더·호밍
	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中SAM)		약 570	약 4.9	약 32	레이더·호밍
	81식 단거리 지대공 유도탄(SAM-1C)		약 100	약 2.7/2.9	약 16	화상+적외선 호밍+ 레이더·호밍
	11식 단거리지대공유도탄		약 100	약 2.7	약 16	레이더·호밍
	81식 단거리 지대공 유도탄(SAM-1)	육상 자위대 / 항공 자위대	약 100	약 2.7	약 16	적외선 호밍
	휴대용 SAM(스팅어)		약 10	약 1.5	약 7	적외선 호밍
	91식 휴대용 지대공 유도탄(SAM-2)		약 12	약 1.4	약 8	화상+적외선 호밍
	91식 휴대용 지대공 유도탄(SAM-2B)		약 13	약 1.5	약 8	적외선화상유도
	93식 근거리 지대공 유도탄(SAM-3)	육상 자위대	약 12	약 1.4	약 8	화상+적외선 호밍
	스탠더드(SM-1)	해상 자위대	약 630	약 4.5	약 34	레이더·호밍
	스탠더드(SM-2)		약 710	약 4.7	약 34	지령+레이더·호밍
	시스패로(RIM-7F/M)		약 230	약 3.7	약 20	레이더·호밍
	시스패로(RIM-162)		약 300	약 3.8	약 25	관성유도+레이더·호밍
	스패로(AIM-7E/F/M)	항공 자위대	약 230	약 3.7	약 2	레이더·호밍
	사이드와인더(AIM-9L)		약 89	약 2.9	약 13	적외선 호밍
	90식 공대공 유도탄(AAM-3)		약 91	약 3.0	약 13	적외선 호밍
	99식 공대공 유도탄(AAM-4)		약 220	약 3.7	약 20	레이더·호밍
	04식 공대공 유도탄(AAM-5)		약 95	약 3.1	약 13	적외선 호밍

HANSUNG UNIVERSITY

용도	명칭	소속	중량(kg)	전장(m)	직경(cm)	유도방식
對함선	88식 지대함 유도탄(SSM-1)	육상 자위대	약 660	약 5.1	약 35	관성유도+레이더·호밍
	12식 지대함 유도탄		약 710	약 5.3	약 34	관성유도+레이더·호밍+GPS
	하푼(SSM)	해상 자위대	약 680	약 4.6	약 34	관성유도+레이더·호밍
	하푼(USM)		약 680	약 4.6	약 34	관성유도+레이더·호밍
	하푼(ASM)		약 520	약 3.9	약 35	관성유도+레이더·호밍
	90식 함대함 유도탄(SSM-1B)		약 660	약 5.1	약 35	관성유도+레이더·호밍
	91식 공대함 유도탄(ASM-1C)		약 510	약 4.0	약 35	관성유도+레이더·호밍
	80식 공대함 유도탄(ASM-1)	항공 자위대	약 600	약 4.0	약 35	관성유도+레이더·호밍
	93식 공대함 유도탄(ASM-2)		약 530	약 4.0	약 35	관성유도+적외선화상 호밍
	93식 공대함 유도탄(ASM-2B)		약 530	약 4.0	약 35	관성유도+적외선화상 호밍+GPS
對전차	97식 대전차 유도탄	육상 자위대	약 12	약 1.1	약 11	레이저·호밍
	01식 경대전차 유도탄		약 11	약 0.9	약 12	적외선 화상호밍
	TOW		약 18	약 1.2	약 15	적외선 반자동 유선유도
對함정 對전차	79식 대함정 대전차 유도탄	항공 자위대	약 33	약 1.6	약 15	적외선 반자동 유선유도
	96식 다목적 유도탄 시스템(MPMS)		약 59	약 2.0	약 16	관성유도+적외선 화상 광(光) 화이바 TVM
	중거리 다목적 유도탄		약 26	약 1.4	약 14	적외선 화상 호밍+레이저·호밍
	헬파이어	해상 자위대	약 48	약 1.6	약 18	레이저·호밍

출처 : 국방정보본부. (2013). "유도탄 성능제원", 「일본방위백서」 , p.513.

HANSUNG UNIVERSITY

ABSTRACT

Japan`s Military Build-up and Korea`s Countermeasure Research

Han, Kwang-Chul
Major in International Security
Dept. of Inter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Hansung University

Increasement of Japanese military power, regarding the sudden rise of China and the global security strategy of United States, is clearly being emerged in Northeast Asia. Japan, which had been prohibited from possession of an army and authority of engagement via the constitution of peace ever since the defeat of World War II, started to expand the security policy in order to cope with a new form of threat for national defense and furthermore for global dimension after Cold War period. Japan's conservative party and America's requirement of extension in regional security are the main influential factors that led Japanese military power to build up whil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and the opposing party are the hinderance to the augmentation.

As a matter of fact, the military reinforcement of Japan has brought a great impact on insurance of Korean security both in positive and negative ways as well as in political, economical aspect. Prime Minister of Japan has officially stated the Right of Collective Self Defense and as

HANSUNG UNIVERSITY

a result the military reinforcement has been actualized and Arms Race in Northeast Asia will be intense. Therefore, in a short term, Republic of Korea executed countermeasure based on criteria and strengthen the flow in the military cooperation and establish trust with Japan and reinforce the alliance between Republic of Korea and United States. In a long term, the insurance in capacity of autonomous security, Northeast Asia peace policy through continuous development in security cooperative system with United States and lastly, the establishment of security cooperative organization within Unite States as a lead are the key factors to deterrent the conflicts in Northeast Asia and Korean peninsula. Republic of Korea must remember its miserable history and investigate measurements in various aspects and promote it for the stabilization of Korean peninsula.

HANSUNG UNIVERSITY